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목 차

I. 감사 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실시대상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4
II. 감사실시 주요내용	7
1. 국방부	7
2. 합동참모본부	35
3. 병무청	43
4. 방위사업청	47
5. 육군본부	66
6. 해군본부	71
7. 공군본부	74
8. 해병대사령부	78
9. 육군지상작전사령부	80
10. 국방과학연구소	83
11.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86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7

1. 국방부(93건) 87
2. 합동참모본부(15건) 98
3. 병무청(24건) 100
4. 방위사업청(49건) 103
5. 육군본부(28건) 109
6. 해군본부(12건) 112
7. 공군본부(18건) 114
8. 해병대사령부(11건) 116
9. 육군지상작전사령부(11건) 117
10. 국방과학연구소 (9건) 120
11. 국방기술품질원 (2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3건) 122

Ⅳ. 증인 · 참고인 채택 현황 및 신문내용 123

1. 증인 · 참고인 채택 현황 123
2. 증인 · 참고인 신문내용 124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입법활동, 정책심의,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25. 10. 13.(월) ~ 10. 30.(목) [18일간]

3. 감사 실시대상기관

구 분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67)	중앙행정기관(3)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등 (33)	직할부대 및 기관(27)	국방정보본부	국방출판지원단
			정보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군무지원단	국방대학교
			계룡대군무지원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체육부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군복지단	국방정신전력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전략사령부		
소속기관 등(6)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 대체역 심사위원회			
합참·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5)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육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본부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1)	육군(12)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해군(4)	육군항공사령부	육군학생군사학교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4)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해병대(1)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사관학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공기관 (5)	국방부 산하(3)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방위사업청 산하(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본회의 승인대상기관(1)			군인공제회	
계			68개	

※ 현장점검

일 자		현장점검 기관/부대	장 소
10.16.(목)		해병대 제6여단	백령도
10.21.(화)	오후	전략사령부	서울 (수도방위사령부)
10.27.(월)	오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오후	현대로템	
10.28.(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15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편성함.

구 분	교섭단체	위원명	비 고
감사반장	국민의힘	성 일 종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부 승 찬 김 민 석 김 병 기 김 병 주 박 선 원 정 청 래 황 명 선 황 희	간 사
	국민의힘	강 대 식 강 선 영 유 용 원 임 종 득 한 기 호	간 사
	비교섭(조국혁신당)	백 선 희	

나.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 국방위원회 소속 직원,
속기사, 원내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위원 보좌진으로 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전 문 위 원	서 덕 교	
	행 정 실 장	신 세 민	
	입 법 조 사 관	김 용 우	
	〃	김 대 은	
	〃	길 기 혁	
	〃	조 정 일	
	〃	김 영 훈	
	〃	최 현 아	
	행 정 관	고 형 태	
	주 무 관	임 병 숙	
	〃	강 량 인	
	〃	박 성 희	
국회사무처	속 기 주 무 관	4 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1 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1 인	
위 원 실	보좌직원	위원실당 1인	

다. 감사일정

[illegible]

II

감사 실시 주요내용

1. 국방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대북대비태세 및 경계태세	○ 9·19 군사합의 체결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자유의 소리를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일환이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보임. ○ 백서 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하며, 북핵 문제를 우리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EMP 옵션 전략무기화에 대응하여 한국형 EMP 방호능력 확보가 필요함. ○ 북한이 현상 변경을 목적으로 새로운 생물학무기를 개발·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생물학·화학무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병력 감소와 침투 전술 변화에 대응하여 경계 전담 부대, 아웃소싱(PMC) 등 다양한 대안을 포함한 경계작전 구조 개편을 검토하여야 함. ○ 2024년 6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이 전방에서 실시한 확성기 방송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특별조사를 하여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통보한 바 있음. ○ ‘GOP 준전단화’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호전성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합리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DMZ 남측에서의 유해발굴 사업은 6·25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자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점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재개하는 신호로 볼 수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조치가 이어질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대했던 수준의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북한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상황에서 군 훈련을 중단하거나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 하는 것은 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보임. ○ 아파치 헬기를 동원하여 수행한 통합정보작전은 정보사령부가 준비한 외환 유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임. ○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이어 접경지역에서의 K-9 자주포 등의 해상사격 훈련 중단은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GPS 교란으로 3건의 무인기 추락이 발생한 만큼, 향후 군이 도입하는 무인기에 GPS 공격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 북한의 드론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규정 문제로 신형 대드론장비 시험 운용이 제한되고, 보유 중인 장비 실사용 훈련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의 SLBM 역량이 러시아 기술 제공 가능성과 함께 급속 강화되고 있어, SLBM 시험·실험 동향을 최우선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함. ○ 북한이 방사포·전술핵·초대형 방사포 등 공격능력을 급격히 증강하며 사격훈련 빈도를 높이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낙관적 평가를 지속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전쟁징후 평가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자폭 무인기·능동방어형 전차 등 전력 대비에서 우리 군의 드론·무인기·기갑 무인화 대비가 현저히 뒤쳐져 있어 전력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현대화 가속이 필요함. ○ 군 기지 내 드론 불법 침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무력화·비행금지구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장비의 실전 운용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킬체인이 선제타격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관련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북한 KN-23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 평가와 이에 대응한 우리 측 미사일 개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24년 북한에 무인기로 전단지를 살포한 것은 외환죄에 해당하며, 당시 대북확성기 설치를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문건은 실제로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대응으로 국방부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함. ○ 북한의 전술핵·자폭 무인기·능동방어 전차 등 신개념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체계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물풍선과 같은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합참 차원에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음.
한미동맹 및 국제정책	○ 미국의 CEC체계 수출거부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자체개발을 하고 있으나, '30년 중반 이후에나 전력화될 예정이므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이미 500여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120대의 J-20 생산 능력을 갖춰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다가옴. ○ 오산기지 압수수색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 내부, 그리고 한미 간 소통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확장억제 공약을 실제 군사적 조치로 발전시킬 구체적 계획이 마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련되어야 함. ○ 한미 모두 확장억제를 ‘행동 가능한 억제력’으로 명확히 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핵추진잠수함 승인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실무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핵연료잠수함 추진을 위해서는 외교부 소관인 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총리실 직속으로 국책사업단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SOFA 규정에 따른 대응 및 한미 협조 체계를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과 중국 견제에 따른 미군 재배치 및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은 러-우 전쟁과 미·중갈등 심화 등 긴급현안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제1의 현안인 우리와 견해 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음. ○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구조물을 지속 설치하고 중국의 항의 불응이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시설의 군사적 정찰 목적 및 영유권 분쟁 가능성을 조사하고, 미군과 협조하여 추가 확장 및 군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대응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동·유럽·미주·아시아 등 권역별 방산 R&D 연계 체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폴스택AI패키지’ 전략으로 AI 주권을 잃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상황임. ○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핵추진잠수함 전력 제공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비용·효익을 전략적으로 판단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야 하며 단순 재정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와 직결된 사안임. ○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용어 사용의 명확화 필요가 있음. ○ 전작권 전환 지연 사유와 군의 역할에 대한 인식, C4ISR 체계 구축 상황 등에 대한 국방부의 확인이 필요함. ○ 전작권 전환 시 필요한 국방비 소요와 국민 동의 여부, 핵 보유국 사례 대비 우리 군의 전시 작전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전력운영·훈련	○ 의무복무를 마친 조종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민·군 보수격차 해소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드론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작전통제권 등과 연계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 KDDX 같은 핵심 전력의 전력화 지연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임. ○ 미래 기술 시대에 AI·드론·사이버 전투 체계 등에서 일반 산업 수요와 방산 수요가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방 R&D 역시 민간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전투체계 발전을 위해 국방부가 무기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을 위해, 국방부 주도로 합참·각군·방사청을 잇는 공통 운영·정비·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가 소요-획득-시험평가-전력화-운영유지-폐기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핵심 군사 데이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해외 데이터 분산 및 이중화 방안을 검토하고 전시 상황에서도 위성을 통해 데이터 접근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과 전쟁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적 후방 침투 중심의 특전사 작전 개념을 현재 전장 환경과 부합하도록 현대화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해 특전사를 정예부대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현역 전력은 자주포·자주화 전차 중심으로 현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은 견인포와 노후 M계열 전차 등 구형 장비를 운용하고 있어 전력 구조의 괴리가 나타남. ○ 소요 제기·적합성평가 없이 도입된 드론이 낮은 운용률과 중국산 부품 사용으로 보안 문제를 초래한 만큼, 향후 대규모 드론 도입 시에는 군 소요 기반 검증과 보안성 확보가 필요함. ○ 현재 시험장들의 공역 규모는 입찰 중인 ‘접적지역대 드론 통합 체계사업’ ROC에서 요구하는 최대탐지거리보다 작아, 장비의 탐지·요격범위에 미치지 못하고 정확한 시험평가가 어려워 보임. ○ 드론 시험 운용 지역을 설정하면서 민간인의 안전과 군사 보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I·드론과 같은 미래전력분야는 방사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드론 전사 50만 양성에 못지 않게 상대적으로 뒤쳐진 무인 전력 확보도 중요함. ○ 보안유지가 가능한 클라우드를 구축해 AI를 활용하여 전장망, 방산, 연구개발 등에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큰 규모의 GPU의 고신뢰 인프라가 요구됨. ○ 북한군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격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사이버작전 역량강화비, 국제사이버훈련비 등이 ‘26년도 정부 예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산안에 미반영된 것은 국방부의 예산 확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본격적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국내규제 조사, 핵심인력 및 조직 구성, 인프라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 원자로 운전자·방사선 관리자 등 핵심 정비 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국방부와 해군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 잠수함 운용, 방사청 및 관련 업체 연계, 외교적 협의 사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TF를 구성·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국방부 차원의 제도적 대비, 기술력 확보 및 건조 기간 단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함. ○ 핵추진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처리와 농축이 가능하여야 함. ○ KF-21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2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군 16 비행단 115정비중대 증축 공사의 설계비라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방부가 AI 전략과 정책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체계, 실질적 인프라, 딥러닝이 가능한 데이터센터·훈련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인재양성 제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국방 AI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조직 정비, 보안이 확보된 국방 전용 AI 훈련장 구축, 슈퍼컴퓨터 도입, 군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및 AI 인재 양성의 제도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CEC와는 별도로 자체 개발 함정에 탑재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함. ○ 국방부 정보화 체계가 스토리지 기반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화재·사고 발생 시 수개월 복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즉시 복구 가능한 이중화·DR(Disaster Recovery)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드론센터를 통한 50만 명 양성 계획은 현재 교육 인원·강사 수 등을 볼 때 실행 가능성이 낮아, 단계별·현실적 전력운영계획이 필요함. ○ 서버·DB 자원 관리시설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 화재·전시 파괴·내부 위협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CIA 등 해외 사례처럼 분산·백업 구조를 고려해야 함. ○ KDDX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며 절차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정치·외부압력에서 독립된 핵심전력 사업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함. ○ 범정부 AI·드론 정책과 연계한 국방부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예산·기술·인력 자원을 통합하고 미래전 대비 국방 AI 전략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각 군 C4I ‘액티브-스탠바이’ 전환 과정에서 전환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전환 테스트·절차 표준화 및 예비체계 구축 등 공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외무관부 통신장비 구축 지연 및 대도청 방위 장비 노후화로 해외공관 군사외교·정보업무의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장비 현대화·예산 확보가 필요함. ○ 현역병 35만명과 아웃소싱 15만명을 통한 50만 대군 유지 구상에 대한 구체적 구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모병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요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핵·화생방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화생방보호의 불량률이 약 50%에 달해 전시 장비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므로, 신행 도입 이전이라도 즉각적인 품질개선과 관리 대책 마련을 하기 바람.
조직·인사·재무	○ 원사 전역 계급을 5급으로 조정하고 9·8급 일부 급여 조정을 통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계급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대위·소령 등 상위 계급을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대우하는 방향으로 봉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군 휴민트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법제화 및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추진하되, 장관 직속화 등 권한 집중으로 인한 정치적 악용 위험을 점검하여 기능별 분산·책임성 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장기 군법무관의 충원율이 미비하므로 군법무관 임용시험 부활을 법무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반환 공여지 매입이 힘들다면 지자체에 장기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재산액의 100분의 1 정도로 낮춰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관련 개념을 우선 정리하고 필요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 및 국직부대 내 해병대 보직과 편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해병대의 역할과 의견이 지휘체계 전반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전략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드론사령부는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통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장성들이 국방부·합참·국직부대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함. ○ 공통·필수직위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장군급 한시편제나 외부 파견이 과도한 상황이므로, 각 군 간 장군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 인력배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비군법을 개정하여 상비예비군 운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운용 성과가 분명해야 함. ○ 군 기강 확립,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병사 휴대폰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이버사령부 전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포함한 인력 유지 방안을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전문사관 임관율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임관계급 상향, 진급 최소연령 특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장병들의 무단 사적국외여행 적발 건수 및 국외 군무이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방부의 장기미수납 채권이 시효 중단 조치 미이행으로 불납결손 처리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회수 조치가 필요함. ○ 장관격려금 지급 대상과 사유를 객관적이고 공적인 사유로 한정하고,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함. ○ 대통령실, 국정원, 국회 연락관 등 파견 인사가 정원에 반영되어야 함. ○ 방첩사령부가 정보수집, 수사, 조사, 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내 장군 구성 비율이 육군 7명, 해군 1명, 공군 0명으로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불균형함. ○ 장관 취임 이후에도 장성 인사가 지연되어 군 주요 장성 보직 공석이 지속되고 있는바, 군단장급 지휘관 75% 공석, 사단장급 지휘관 과반수 임기만료 후 연장근무 등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준장 진급심사 및 장군 인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장성급 인사 실시가 필요함. ○ 현직 군인의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을 연장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숙련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방 문민화 기조에 맞게 국방대 현역을 야전부대로 보내고, 총장도 민간인을 임명하는 등 개혁이 필요함. ○ 법무관 확보가 미흡하여 항소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사령관 등은 법무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인사 운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방대 총장 직위의 문민화 추진 필요성 및 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 상대적으로 법조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법무사관 출신 법무관들에 비해 더 빨리, 더 높은 비율로 진급하는 것은 불평등 요소가 있음. ○ 국방정보본부장에서부터 전략사령관까지 22개 부대의 지휘관은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안 됨. ○ 효과적인 장성 인사운용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개혁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4성 진급을 이유로 유능한 장군들이 조기 전역하는 병목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능사령부 등 보직을 확대하여 장군 인력 활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첩사 개편과 정보사 개편이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방첩사 개편은 단순 해체가 아니라 불법계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순수 방첩 기능 강화 방향이어야 함. ○ 첩사에 부여된 주요 임무와 핵심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방산·군수·보안조사 기능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되, 간첩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 이후 수사 효율 저하 우려가 있는 만큼 방첩 컨트롤타워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있음. ○ 간첩 활동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간첩 수사를 정보·수사 기능 분리 체계로 수행할 때 수사 효율 저하·책임소재 불명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방첩사를 해체할 경우 간첩 검거 역량이 저하될 수 있는바, 경찰·정보기관·군 방첩 조직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재점검하여야 함. ○ 방첩사의 기능을 보완·개혁하는 대신 폐지·축소하는 방향이 국가안보 강화에 부합하는지, 특히 간첩법 개정 지연 상황에서 방첩 기능 축소가 간첩 수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지 않는지 재검토해야 함. ○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방첩 기능을 정부가 축소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문민정부 기조 및 ‘신뢰받는 강군’이라는 국방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MZ세대 병영 내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군사학이 아닌 일반 교양과목 등에서는 민간인 교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군인 교수는 군사학 등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카투사 선발 시 영어 점수 외에 리더십, 적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배치기준, 평가방식, 인원배정 정책을 보완하여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지뢰 반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뢰대응법상 자격요건 강화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병역법 제21조제3항 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상근예비역 처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한민고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교육부·교육청과 협력하여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기획득 과정 장기화를 고려할 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KIDA 사업타당성조사 부서 활성화와 업무 추진력 제고가 필요함. ○ 양형위원회에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 설정의 적기라고 판단됨. ○ 국직부대 증가·육사 편중 인사 등으로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정보사령부 지휘라인이 인사평가·진급을 장악하며 내부 권력화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 ○ 부대·사령부 신설 시 기존 야전부대에서 인사정원(TO)을 차출하는 방식이 관행화되며, 야전 전투력 약화 및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병력운용 원칙 재정립이 필요함. ○ 초급간부 이탈·희망전역자 급증 등 인력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어 인건비 구조·처우개선·전역관리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함. ○ 상비예비군·예비군·퇴직 군인의 공무직 활용 등을 통한 인력 구조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됨. ○ 국직부대와 국직기관에 대하여는 지휘관의 부대 방문 부족, 이·취임식 임석상관 부재 등 지휘·통솔 책임 축소 문제가 반복되고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있어 재정비가 필요함. ○ 비상계엄 관련 사안이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직속기구 포함)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군의무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국정기획위 보고내용, 공공의대 연계 여부, 정원·예산, 교육·실습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생도 교육 및 실습 수요 대처방안과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 상황을 고려한 군의관 확보 대안까지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비예비군 장비·훈련시설 노후화 및 부족으로 실전 대비에 한계가 있어, 장비 보강·훈련체계 개선을 통해 예비전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 규모 변동 및 조직개편 이후 미사일 개발 속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군무원의 신분성격, 저연차 군무원 이탈 사유, 처우·복지 격차 등을 고려하여 신분 명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의 정보·보안 부실로 계룡대 시설배치도 등이 오픈스트리트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부대 명칭 규정 미준수 문제 등 군사보안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예비군 부대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군이 전술 훈련 및 기본훈련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임무 부사관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권고안’은 국방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특수임무 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국방연구원(KIDA)내부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질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업무는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히 할 필요
감사 및 조사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군 정보조직 개편을 추진하여야 함. ○ H업체의 군사기밀 절취로 KDDX 전력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행위이므로 처분시효가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함. ○ 사이버사령부가 실시한 사이버보안 취약요소 분석에 대해 한 달 안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나 미보고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총기·탄약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방첩사령관과 사이버사령관이 2018년 금지된 심리전에 가담하였는지, 내란에 관여한 것인지 밝혀내기 위해 수사가 필요함. ○ 방첩사령관은 10월, 11월 국군드론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공군작전사령관의 위증 여부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위증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하도록 처리하기 바람. ○ 4성장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0월 15일 망실한 소형 정찰무인기에 대한 드론사령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허위이며, 국방부 감사관실에도 허위로 보고한 것임. ○ 특별검사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군인의 참여 적절성, 참여 인원 명단 공개 필요성, 국방위원장 자료제출 및 대면보고 요구 미이행 사유 등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민고는 각종 감사에서 드러난 회계·인사 비리, 입찰비리, 성비위 의혹, 내부 고발자 탄압 등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계엄 전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음. ○ ‘23년과 ‘25년 계엄실무편람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절차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 수정 이전 ‘21년판으로 돌아가 계엄실무편람을 개정해야 하며, 계엄실무편람을 위법하게 개정한 관계자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음. ○ 국방대 총장 직위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직위가 소장으로 격하된 조정에 대해 특정 인물 영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불법 비상계엄으로 골프 자제령이 내려져 있음에도 골프를 즐긴 군인들을 엄하게 문책하여야 마땅함. ○ 방첩사령부에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여야 할 인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 바 있는데,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보직관리가 필요함. ○ 전 정부에서 고위 인사들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원에 대해서는 엄정히 문책하되, 핵심 지휘관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포천 오폐사고 원점기준 피해가 발생한 3개리에 대해 지원조치를 철저히 하고, 군의 사격장 안전조치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985억 원이 투입된 스마트 플랫폼 사업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손실, 전임 사장의 고액 고문료 지급, PC·노트북 대량 폐기에 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함. ○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장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되는 「계약업무시행세칙」 또한 개정이 필요함. ○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시설 피해·예산 지출·장병 심리피해 등 국가적 손해와 책임자 구상권 검토 필요성이 있음. ○ 내란 의혹 인사들의 진급 예정, 내란 의혹 지휘라인의 내부 권력화 등은 특검과 병행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불법계엄 사태 전후 주요 인물들의 방첩사 방문 정황, HID 예비역 활용 의혹 등 내란 사조직·정치공작과 연관된 정황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 ○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군 인사조치를 전수조사하여 계엄과의 연관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국비상계엄 군사법원 관할 확대와 관련하여 군·사법부 협조경위가 불명확해 내란 공모 여부와의 연관성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주요 작전부대 지휘통화 녹음자료 보존·제출 여부가 불명확하여 특검 조사와 국회 검증에 협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검 제출 군사자료를 국방부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여부, 군 내부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 특정 의원의 공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가 필요함. ○ 군인공제회 렌트 차량 계약 종료 시점 관리 미흡으로 연장·중복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계약·운영 전 과정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함. ○ 렌트 차량 운행일지·하이패스 기록 누락 사례가 있어, 차량 운행·유류비·통행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감사체계 강화가 필요함. ○ 일부 민간위탁 식당의 1인당 식자재 소비량이 타 병영식당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 이는 업체의 식자재 과다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 신입 상임감사가 취임 직후 특정 차량옵션 견적을 사전 확보한 경위, 신규 계약 시 상임감사 요청 옵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감사·계약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KNTDS(전술지휘통제체계) 정보·통신기록의 보존 범위·기간·형식이 명확하지 않아, 세월호 등 국가적 재난 당시 군의 대응·정보를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기록관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함. ○ 세월호 관련 군 측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 판단이 부재한 문제가 있음. ○ 사참위의 KNTDS(전술지휘통제체계) 자료 열람·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문서 제출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군 기록이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군납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납 대행업체가 벤더 역할을 하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격 왜곡·허위자료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어, 군납 구조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함.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군납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 제재조치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군납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국방대의 육사 편중 교수진 구성 및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보건복지 및 제대군인 지원	○ 현장에 투입되는 국방부 유해발굴단 숙소 준비와 경계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군 복지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미래전투체계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른바 ‘신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군인과 군인 가족의 생활 여건 및 전역 이후의 삶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TF 구성, 급여 비교 기준의 공정한 설정, 주거 · 교육 지원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여군의 예비역 편입 자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형평성과 예비전력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임. ○ 병역자원 감소라는 국가적 현실 속에 여군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전력 공백으로 연결되므로 여군 예비역 편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국방부 주도 민간위탁급식 사업 확대 규모 및 속도를 재검토하되, 장병 급식단가를 물가 · 식재료 가격 상승에 맞게 현실화하고 부실 급식 · 가짜 원산지 · 중국산 김치 사용 등에 대한 강력 제재 및 국내산 인증 식재료 · 가공식품 납품 확대 등 품질관리 · 제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양성기관 추가의 적절성(임관 인원 채우기 비판 포함), 임관을 변화, 관련 예산 미반영, 낮은 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수·진급·보직 불리 및 전문성 미활용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보수·진급체계·직무설계 개선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선행 사업인 밀리패스 사업과 후행 사업인 장병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방산기업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도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한 부사관들의 군경력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도록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가 작성한 진중문고 검토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연금 수급률이 50% 이하에 그치고 다수의 군인이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함. ○ 군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직업군인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군인 직업안정성 보장을 위해 보수와 정주여건 관련 입법, 예산 확보, 제도개선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 증가와 관사·주택수당·군인연금 등 혜택 소외 문제를 고려하여 군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함. ○ 군 체력단련장 이용 민간인 요금 현실화, 주 이용층인 장성·영관급의 요금 차등화, 불필요한 할인혜택 폐지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전체 군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함. ○ 논산훈련소는 기초 기본훈련 및 군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적응하도록 신병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해당 취지에 맞게 훈련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는 직영급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병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군급식이 효과적으로 운영 되도록 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함. ○ 조리 자격 보유자 또는 조리 유경험자 부족으로 비숙련자 투입에 따른 안전, 위생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조리병의 열악한 복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장병 전체 기본급식비 중 농·축·수협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되는 농·축·수산물 비중이 26%로 매우 낮아 수의계약 비중이 확대되어야 함. ○ 장병들의 심전도·심초음파 검사 등 심혈관 질환 관련 검사를 정례화하고, 국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심혈관 질환 검사 장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자에 대한 석식과 조식 등 식대 지원이 필요함. ○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 군인연금 전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유족 연금 담당자 증원이 필요해보임. ○ 부대별 특성, 부대 규모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인력을 조정 및 증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열악한 업무 실태를 인식하고, 고용 환경 개선·고용안정 및 퇴직 연금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함. ○ 군 내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장교-부사관-용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2025년 당해 담배선정 심의간 변경된 심사요소가 명확히 계량화되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2025년 선정심의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 바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최근 10년간 군 사망자의 약 68%가 극단적 선택으로 분류될 정도로 병영 심리건강 문제가 심각함. ○ 순직 장병 사망 유형을 I형·II형·III형으로 구분하고 참전명예 수당이 월 48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책임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군 사망사고의 약 2/3가 자살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원인분류·III형 순직 기준이 모호해 예방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사망 유형 분류체계·순직 인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움·배려 간부 제도가 실효성 부족 상태로 운용되며 위험군 장병 보호에 미흡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군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의 손해율이 최근 5년간 민간 단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손해율 산정의 적정성과 보장구조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이후 GOP 근무 소령·대위 간 급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지휘체계·조직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직무·책임 수준을 고려한 급여 체계 정비 필요함. ○ GOP 소령 대상 특별수당 신설 논의가 무산된 배경을 점검하고, 단순 수당 일시 지급이 아니라 장기 복무 유인과 연계된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인가족이 겪는 잦은 전출·전입, 교육·돌봄 불안정, 배우자 경력단절 문제를 군이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사를 줄이는 인사정책, 지역별 교육·돌봄 인프라 연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인가족의 일자리·교육·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부·지자체·교육청·고용노동부를 연계한 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군무원·장병·간부 전세자금 지원 기준(5인 이상 가족) 등이 현실 주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3인 이상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함. ○ 군 내 불법도박 실태조사가 표본·방법 측면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군 발굴·상담·징계·교육이 연계된 종합 대책이 필요함. ○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차단 장치·망 관리 강화 및 교육·단속을 병행하여 병영 내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순직자에 대한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과거 사건 포함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사망사고 유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장례·상담·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유족회·관계기관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미순직자 직권조사,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조직 설립 등 인권·사망사고 관련 제도개선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 설치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함. ○ 전문약제병 충원 현황, 경쟁률, 약사면허 발급 시기와 지원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음.
주거·부대 및 시설 이전 등	○ 군인공제회를 활용해 유휴 군용지에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분양하여 전역 예정 부사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인은 전출지역 독신자숙소에 머무르면서, 서울 관사에는 가족이 거주하며 퇴거 지연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퇴거 지연자의 중복 숙소 제공 금지 등 제도적 차단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대구 군 공항 이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초급간부 관사 입주 시 청첩장 등 결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혼인신고 이전에도 관사 입주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는 현 용산 집무실은 국방부가 다시 입주하고, 합참 등도 원래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합참 신청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군의 피해를 점검하고 향후 국방부·합참 재이동에 대비한 예산 추계와 반영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인 이하 가족’도 전세자금 이자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달하여야 함. ○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따라 영내·영외 분산 배치된 국방부·합참·국직부대 영내 통합과 재배치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인가족 이사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시 안보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설정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될 필요가 있음. ○ 미활용 군용지가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시·도에 필지별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연구용역과 계획 수립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 ○ 경기북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보다 폭넓게 추진하여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갈매역~별내역 구간의 군 전용철도로 인해 도시철도·GTX 연계 개발이 예정된 별내역 주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남양주 정비중대 이전 완료 부지에 종합문화복합관광센터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협조가 필요함. ○ 포천 수송대대 이전 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진입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형 군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신속획득원의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완공 후 입주예정’ 계획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방침과 배치됨. ○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10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자기금 이자 부담 등 지자체 부담구조 개선이 필요함. ○ 미군기지 환경복원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SOFA 환경조항 또는 별도 합의를 통해 책임분담 구조를 개선하고, 환경오염 정화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 공여지는 환경 정화, 지역 개발 모두 ‘시간’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환경부·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반환 지연에 따른 주민·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국정계획에 명시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과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 ○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매각 위주의 군 유희지 활용 방식을 임대로 전환하고 임대료 산정을 법제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수관리 · 시설관리	○ 최근 군대 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범정 점검 체계만으로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움. ○ 최근 SNS 위치공유 기능이 추가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시설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방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관련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국방행정망, 각군 전장망 화재 시 지휘 통제 공백으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여군 비중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전쟁기념관 내 여군 전시 부스 및 콘텐츠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대한해협 주변의 장거리레이다가 노후되어 스텔스 탐지가 어려우므로 스텔스 탐지가 가능한 저피탐레이더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 백령도 서북도서 해수펌프 정비 등 장병의 안전한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성남비행장의 활주로 각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조정시 일부 지역은 해제된 반면 새로 설정되어야 할 구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방 전산체계 생존성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GPU · 서버장비용 RACK · 전력 및 냉방설비 등 인프라 마련이 필요함.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에서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 기타지역은 80이상 90미만 웨클인 경우 3종으로 적용하고 있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데, 수원,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비행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재 고정익과 회전익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웨클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있어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폐쇄 사격장에서 납·구리 등 중금속 농도가 법 기준의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확인되어 장병·주민 안전을 위한 사격장 환경안보 강화가 필요함. ○ 전국 사격장 1,200개 중 5년간 환경조사가 35개만 이뤄졌으며 정화 미완료 사례가 많아 정기 환경조사·정화체계 제도화가 필요함. ○ 국가유산 지표조사에서 유적물 산포지로 확인된 보호구역 인근·내 사격으로 유적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전수조사 및 사격장 운영기준 재정비가 필요함. ○ 군 유희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부대 해·창설, 병력감축, 중복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설계획·부대 구조조정과 연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기 타	○ 바이오를 산업 관점에서만 다루는 정책 기조로는 국가 생존 위협에 대응할 수 없어 국방바이오 분야의 발전이 중요함. ○ 베트남 국방부 차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민과 군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 ○ 예술 병과가 존중받는 조직 문화와 복무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불법·부당한 명령’ 판단 권한과 관련하여 서훈·포상의 적절성과 계엄 시 군인의 명령 불복종 판단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필요함. ○ 가점 부여를 통한 기초적 군사지식 습득 독려를 폐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국군의 뿌리 역시 독립군·광복군에 두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함. ○ 단어의 의미와 어감 등을 고려할 때 ‘전쟁기념’ 보다는 ‘전쟁 기억’ 이라는 명칭이 적절해보임. ○ 연구기관이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산출을 멈추는 것은 독립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음. ○ 국방백서 발간 지연에 따른 최신의 국방력 평가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진중문고 선정 절차 부실로 부적절 도서 배포·폐기가 반복되는 문제 개선이 필요함. ○ 정밀지도·지리정보 국외 반출 및 구글맵 오표기 문제는 국가안보·영토주권에 직결되어 정보관리·비식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정밀지도 및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자료의 국외 반출·저장·활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민감 군사시설, 전략요충지 등이 상세하게 노출될 경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 ○ 전쟁기념관 상설전시가 특정 역사 인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2. 합동참모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전력기획 및 방위력개선	○ 한국 000연구소는 ISR(감시정찰 14.55조원), KAMD, KMPR 등 핵심 역량 확보에 최소 3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3축 체계 내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 목표를 고려하여 전력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전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기존 3축 체계의 탐지-결심-타격 과정에서, AI 기반 정보처리를 통해 ‘결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타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참 차원의 전력화 로드맵과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함. ○ 적 CRBM을 군집 드론으로 대화력전 이후 타격한다는 것은 전방 군단, 전방 사단 작전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첨단기술 획득 및 적용을 위해 합참 소요 결정 단계의 제도적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KF-21 장착 예정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이 합참의 필요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적의 방어체계 돌파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를 교훈으로, 우리 국민·국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력투사를 통해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공군력과 특전사를 연계한 신속 기동타격 부대 운용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임. ○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전략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현행작전 차원의 다영역 작전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파병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F-4·F-5 전투기 퇴역에 대응한 KF-21 도입이 충분하지 않고,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KF-21의 무장 소요는 기존 전투기들이 30일 기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3일 기준만 적용되어 전투 지속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대북대비태세 및 경계태세	○ 자유의 소리는 평시에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임. ○ 적이 아군이 상주하는 GP까지 접근하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작전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발표 이전이라도 합참 차원에서 국민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미사일 대응 관련 사항을 사전에 설명·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서해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군 귀순 시 경고사격과 같은 군사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필요함. ○ 북한의 TEL 전력증강 속도를 감안할 때 BMOA 내 적 CRBM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북한이 해상 핵 능력 확보를 위하여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진수하고, 중·러 해군이 서/동해에서 작전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 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 대북 경계태세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됨. ○ 위병소 등 외곽 근무자에게는 테이저건, 가스총 등 비(非)치명성 대체 무기를 휴대하게 하고, 긴급상황 대응능력에는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도록 이원화하여 무장수준을 적용하는 명문화된 지침이 필요함. ○ ‘외곽 근무 시 총기 및 탄약 비치 원칙’과 실제 운용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고, 지휘관에게 재량을 부여한 현재 체계가 오히려 혼란과 위험을 낳고 있다고 보임. ○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J-20이 대한해협 동수로(쓰시마해협)를 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한국과 일본군 당국 모두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우리 군이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보복 공격이 가능하여야 함. ○ 사거리 기준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해야 하는 B급 이상 군사행동에 해당하는 NLL 인근 포사격 및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하여, 당시 합참의장 및 작전부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는 활공형 유도탄으로 요격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요격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DMZ 및 정전협정 적용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유엔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관련 작전 수행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유엔사 협의·승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음. ○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군사적 방벽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은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음. ○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은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 비행경로, 발사지점, 왕복 궤적, 암호장비 등 군사기밀 정보가 북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으로 인한 드론·미사일 혼합 공격 등 새로운 공격 전술 사용 가능성과 DMZ 내 대전차 방벽 구축에 대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및 인접 해역에서 시설물 설치와 군사 활동 등을 통해 서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그 심각성을 대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합참 차원에서 전략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작전적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군이 대북에 대해 시행한 군사적 조치는 계엄령 발령을 위한 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따른 대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북핵 위협의 다양한 사용 방안과 양상에 대한 선제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대비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타난 라스푸티차 현상과 유사한 지반 문제가 DMZ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작전·훈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사이버전·전자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심리전 또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수단인 만큼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9·19 군사합의 복원은 포병훈련·기동훈련 제한 및 정찰감시 활동 제약 등으로 방어상 이점을 악화시켜 군사대비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참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군사적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핵 및 EMP 공격 대비 방호시설 건축, 방사능 보호장비 조기 보급이 필요함. ○ 북한의 동향을 살펴서 북한 무기 개발 수준을 저평가하지말고 무기 개발 방향성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포함하여 대북위협에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
합동성 강화 및 조직운영	○ 현대 드론전쟁은 불특정 다수가 표적이 되리라 예상되는 바 국가 주요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관·경 통합대응 체제가 수립되어야 함. ○ 특전사 작전팀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예산과 장비를 집중 지원해야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병력 감소와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5사단 AI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합참-육군 간 임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사령부는 북핵 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나 합참 및 각 군 작전사령부와의 지휘·임무 중복으로 ‘옥상옥’ 구조와 역할 구분 불명확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의사결정·명령체계를 단순화·일원화하는 방향에서 유지 여부(또는 우주전략사령부 중심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 조직 개편)를 검토하여야 함. ○ 합참 내 인사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개혁법 제29조에 따른 인사 균형·순환보직 원칙 위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합참 공중중심작전과에서 발행하는 「군 관할 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제13조에 따르면, 위규 비행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어 엄격히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 ○ 「군 관할 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은 위규 비행 통제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합참 법무실에서 특정군, 특정인을 배제하는 조직을 임의로 만들어 합동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음. ○ 합참 법무실 근무평정을 1차 실장, 2차 합참차장으로 개편하여 법무실이 폐쇄적인 조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종심용 및 전구급 운용은 빠른 결심과 타격을 위해 지구사·공구사·해구사 또는 전략사령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역할을 국방개혁과 연계해 재검토하되 드론 발전을 위한 기능사 전환 등으로 작전·소요 발전에 특화하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고, 전군 차원의 드론 전력체계 운용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합참 신청사 사업이 불가하다면 합참 부서들이 각 건물로 분산 배치된 현 상황에 대처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략사령부와 같은 신규 부대의 합동작전 교리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합동전투발전업무 전문인력 확보와 합참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 ○ 군사용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군비통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기술의 국방 보안 및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여야 함. ○ 사이버사령부는 2024년 9월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기존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찰임무 TF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됨. ○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관련 작전은 해당 사실을 합참의장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짐. ○ 비행장 이전이나 재건축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까지는 20~30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장비 복지 차원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개선이 필요함. ○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 노력이 필요함. ○ 합참의장은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보다는, 군이 전시·유사시 전투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유지와 작전 수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합참은 조직 운영 및 지휘체계 전반에서 각 군 간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병대 준4군 체제와 관련하여 해병대의 독자적 지휘권과 위상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합참 인사 운영에서 사관학교 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 인원에게도 균형 있는 보직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12·3 내란 이후 업무용 휴대폰 교체 현황 전반에 대해 합참 차원의 점검이 필요함. ○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임무가 상륙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도서방위·상륙작전·신속대응 작전 등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을 위해 해병대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육군이 행사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조정이 필요함. ○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과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참에 보임되는 본부장·부장급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합참의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현 상황에서는 초기 ROC(작전요구 성능)에 기반한 설계가 사업 완료 시점에 이르러 구형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일반 합정사업의 경우에도 KDDX와 같이 기본설계 이후 ROC를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한미동맹 및 전작권 전환	○ 한미일 TSCF 합의를 통해 군사협력이 정례화되었고, 활동 영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확장되었음. 국익 중심의 인태지역 군사적 기여 범위의 상한선과 이를 초과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한미연합훈련이 작전 및 정보공유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새로운 역내 안보환경에 맞는 동맹 역할의 재조정을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대북 억제 외 대중국 억제 기여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미측 발언과 국방부장관 발언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 합참의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단순 협의 수준을 넘어 작전 계획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합참은 C4I 기반의 지휘·통제·통신·정보 통합 능력, 정보공유체계 및 전쟁 가시화 역량을 완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함. ○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서 합참은 우리 국익과 자주국방 관점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볼드 퀘스트(Bold Quest) 훈련과 관련해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현재 읍저버 참관에 그치고 있는 한국군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25사업과 관련하여 국방정보본부의 감시·정찰 자산 운영을 위해 인원 보충이 필요함.
기타	○ 사이버작전은 대북·대적 임무에 한정되어야 하며, 방첩사의 통합정보작전·사이버심리전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합참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지휘체계 재정립이 필요함.

3. 병무청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병역자원 및 입영동원	○ 이중국적을 가진 병역의무대상자 중 국적 포기하고 40세가 넘어 입국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함. ○ 병역면탈 조장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증원 및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이 필요함. ○ 정신질환 관련하여 신체등급 3·4급 판정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6개월 이상 치료 기간 부여로 정신질환자 치료 기회 제공 및 병역 면탈 방지가 필요함. ○ 동원훈련 응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위법 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병역면탈 범죄자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 대책이 필요함. ○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연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강화가 필요함. ○ 잠복결핵검사 축소 운영 관련하여 국방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 정신질환 사유로 현부심 판정자 중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여성의 병역 복무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외 병역자원 관리를 위하여 주요 재외공관에 병무 업무를 담당할 병무주재관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역 편입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위원회 정원 축소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예비군 소집 관련 행정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함. ○ 병력동원소집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 불참 시 고발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신질환 악용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병역면탈에 이용된 허위증명서 발급 의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부여가 필요함. ○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 자원 부족을 대비하여, 여성 복무, 민간 아웃소싱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 해외동포의 병역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병역 이행 지원 대책이 필요함. ○ 디지털 포렌식 수사 남용이 개인의 사생활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병역면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일반의 대체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입영 시 일부 인원이 마약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전수 조사가 필요함 ○ 창업 사유 입영 연기 제도 연기 기간의 확대가 필요함. ○ BMI 수치변경으로 입영한 입영자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복무지도관 증원이 필요함. ○ 사회복무요원의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복무 의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 사회복지요원 장기대기사유 병역면제 처분 증가는 지방이양사업과 관련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부적합한 업체가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함. ○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대체복무 제도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관 추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가능한 무늬만 국제대회인 각종 대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복무기관에 사회복지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명확한 지침 전달이 필요함. ○ 사회복지요원 전자적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선호에 따라 미배정 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지요원 복무태만자 복무지도교육 미이수자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해외 근무 전문연구요원 복무 실태 파악이 필요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지 다양화 등 대체복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기타	○ 12.3내란 시 경계태세 2급 발령한 바 있는데 병무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이 필요함. ○ 병무청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담조직 상설화가 필요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상근예비역 제도, 국적취득자 병역 제도, 외국 국적 취득 관련 병역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탈북민 병역 의무 선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 관련하여 감사원 등 타 기관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가 필요함. ○ 의대 정원 확대로 전공의 이탈이 이어졌고 병무 행정에 영향을 줌. ○ 군가산점 제도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위험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한국어 소통 가능 외국인 군 복무 후 시민권 부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니어 아미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각 군에서의 피복 지급을 위하여 입영대상자의 신장 등 신체정보를 각 군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병역 이행 지원 대책이 필요함. ○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혜택이 지자체 따라 상이한 점은 문제가 있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방위사업청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인사 및 조정	○ 방산수출 확대에 비해 수출 지원 인력 증가는 미미하므로 인원 증대를 위하여 행안부 등과 협조할 필요 ○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이므로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필요 ○ 2023년 기준 80억 넘게 방위산업진흥회에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방위산업진흥회의 방만한 운영과 내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방위산업진흥회의 내부갈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감독 철저히 할 필요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출석, 대참 문제에 대한 질의 ○ 논산 국방산업단지는 유일한 국방 관련 지방산업단지인데, 국방 신속획득기술원 등과 함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방산업단지에 지상로봇 시험시설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 ○ 소송이 과도하게 많으며 패소율 평균 30%, 패소금액 6,000억원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업무 전문성을 높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방산수출에 있어 조직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수출과 방산생태계를 종합할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2026년도 R&D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상향식 연구개발 예산은 1.9%도 못미친다는 문제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업별 기획 특성과 평가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 연구개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발과 동일한 수준의 실패 용인 제도로 개선할 것이라 답변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 국방우주기술 경쟁력이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데, 국방우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미래 전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예산 및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 ○ 선진국의 국방우주체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원확보에 노력할 필요 ○ 방위사업청 국장급 보직 상당수가 공식으로 한국형차기구축합(KDDX) 사업이나 군사용 정찰위성 사업이 시급함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질의 ○ 블록화되고 있는 유럽 방산분야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컨트롤타워 필요함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유럽 진출을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해외 파견 인원 관련 조직개편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일회성 예산이 아닌, 별도 기금 마련으로 제도적 유연성과 재정적 지속성 확보가 필요 ○ 방위산업분야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가이드라인 부재한 것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ESG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답변 ○ 방위산업은 승자독식구조이므로 방위사업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함.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민관군이 협력하는 혁신적 구조 만들 필요 ○ 방위산업에서 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컨트롤타워로서 혁신 필요
획득기획	○ 드론 체계 국산화를 위한 군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100, 부품국산화지원사업 등을 통해 드론 체계 국산화 개발을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는 ‘드론 국산화 협의체’에 참여하여 업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무협력을 추진중이라는 답변 ○ 군용 드론용 국산 모듈 + 배터리 확보, 군용 국내 ESS (에너지 저장장치)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군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신속시범사업’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의견 ○ 방위사업청과 군은 방산업체가 개발한 자폭드론에 대하여, 시험 평가, 시범도입, 운용피드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개발한 자폭드론을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 및 무기체계 사업으로 획득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전력화 실적은 없다는 답변 ○ AI는 데이터 확보와 학습이 중요한 체계로 기존 획득 절차를 개선할 필요 ○ AI 무기체계 개발 관련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폭포수’ 개발방식과 소프트웨어 중심 ‘애자일(Agile)’ 개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개발과정을 짧은 주기로 반복하며 시제를 빠르게 운용자(軍)에게 제공 및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계를 개발하는 애자일 방식 도입 등 획득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는 답변 ○ AI 무기체계는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축적 등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AI 무기체계 개발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애자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방안 강구 필요 ○ SW 중심 무기체계에 적합한 별도의 획득절차 신설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필요 ○ 북한의 신형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단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5,000톤급 최현급 구축함에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대응한 장거리함대공미사일 SM-6(고도 30km 이상 종말단계), SM-3(90km 이상 중간단계)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드론의 크기, 용도 등을 고려한 드론 무기체계의 획득절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신속획득 제도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군 소요와 연계 강화 필요 ○ 현재 AI·드론·우주·사이버 영역에서 새로운 획득방식 도입 및 제도 보완 필요 ○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획득 절차 보완 필요 ○ 신속획득 제도를 통해 실제 전력화된 사례와 성과, 구체적으로 획득 기간 단축 효과 등에 관한 질의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4)와 국방부 내부 감사(2023)에 따르면 ‘신속획득절차’ 확대 시 사업 실패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위험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 ○ 러시아는 약 900개 위성과 100개 이상의 원격 감지 장치 운용을 위해 78조 6,70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중국도 내년까지 저궤도 위성 650개 운용을 목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방 우주력 수준에 대한 질의 ○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는 군 통신위성과 정찰위성을 보유 중이며, 2035년까지 저궤도위성통신체계, 레이더우주감시체계, 군용 위성항법체계 등 다양한 우주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 세계 각국은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고, 궤도를 이탈한 위성을 추적해 언제 소멸하는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의 대우주 국방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지적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방위사업청은 올해 10월 주한미우주군 사령관 면담 등 미국과의 우주 공조를 강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국방우주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긴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강화할 필요 ○ 선도적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찰 및 감시 능력을 갖추어 동시에 미국 우주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필요
방위사업	○ 현대중공업의 3년 제재를 심의한 제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없다는 답변 ○ 기존 제출자료의 “보안감점 적용기간 연장 적용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다” 관련 방위사업청의 공식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특정 기업과 연관지어서 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 ○ 방위사업청이 법무검토 결과에 대하여, 2025. 9. 30. 대변인과 기자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방위사업청의 공식 공개가 아닌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개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국내에서 개발된 자폭드론을 신속히 시험평가하고, 소량이라도 우선 도입해 실전 운용 결과를 기술개발에 즉시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자폭드론의 적극적 예산투자, 시험평가체계 구축, 조기 전력화 로드맵 수립, 전용 시험장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 ○ 2024년 5월 1일 「방위사업법」 및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발생 원가 적용의 원칙, 추가 정산 가능 범위(최초 계약금액의 3% 이내)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 및 계약의 특례 등을 개정한 취지 답변 ○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보안점수를 적용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하는 기간에 대한 법무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 영향이 있을 우려. 방위사업청은 방추위의 의견을 따르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할 것으로 답변 ○ 부정당 거래는 K-방산 신뢰성과 국가브랜드에 악영향을 주므로 부정당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실히 할 필요 ○ 자폭드론이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개발이 뒤쳐진 것에 대한 지적 ○ 425 사업은 2015년에 착수하여 2024년 4월에 2호기 SAR 위성을 발사했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는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체계개발을 완료했는데, 2개의 사업에서 연동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설계 확정시 425사업 위성영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상용 위성 수준으로 연동을 수행하였으나 425 위성이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함에 따라 연동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 ○ 현재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완성형 사업은 예정임. 향후 시행될 사업에서 연동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중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 사업과 같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다목적무인차량 기종결정 단계에서 성능확인 관련 원칙이 없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사업이 지연된 사항 질의 ○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하여 보안감점과 관련하여 범 리 검토가 늦은 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를 보다 세밀히 할 것이라고 답변 ○ 미래 유·무인복합체계를 고려하여 대형공격헬기 구매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현용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방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위사업청은 현재의 전투준비태세를 커버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논의 예정이라 답변 ○ UH-60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추진하면서 화재진화능력을 위하여 담수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전투장비로 탈부착이 안되는 문제와 담수장치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 ○ 구매한 드론의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어서 부대 경계가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국산 드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답변 ○ 해군 유도탄고속함(PKX-A·450급) 대유도탄기만체계 예산 증액 현황 제출 바람 ○ 대유도탄기만체계 도급 선정 불공정성 논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대유도탄기만체계는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체계통합 중요성, 계약적 책임관계 명확화를 통한 사업 리스크 감소를 위해 도급으로 결정하였다고 답변 ○ 대유도탄기만체계 도급 선정의 근거 법령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59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였다고 답변 ○ 독일 라인메탈사의 튀르센 그룹(함정부분) 인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방산업체의 해외 함정 수주 경쟁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 및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대한 질의 ○ 군단정찰용UAV-II Block-1사업 시제기가 모두 파손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질의 ○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 업체간 갈등 해결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시발주, 공동설계 등 검토하였고 해결방안 모색중이라고 답변 ○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기술 유출 사건을 두 개로 나눠서 보안 감점을 매긴 것은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기술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절취 관련 기업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방산 신뢰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 질의 ○ 연구개발한 차기군단급 Block-I 무인기 시제기 4대 중 마지막 기체 3호기 전손에 대한 질의와 사업관리 소홀 지적 ○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방위사업청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방산업체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전략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업체비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정부비축’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방산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 등을 정비할 필요 ○ 방위사업청은 비축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법령, 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소요군·업체·산업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방산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 ○ 특수침투정 사업은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31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 ○ 특수침투정의 획득방식을 국외구매로 변경한다면, 방산업체에 내려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부터 취소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판정 취소는 합동참모본부 소관으로 합참 등과 논의하겠다고 답변 ○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의 추진 진척도와 부진에 대한 질의 ○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근거리정찰드론 사업 등에서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작전운용성능 설정과 시험평가 방식에 대한 지적 ○ 방위사업청은 드론의 긴급 전력 확보와 국외 기술을 따라잡기 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 ○ 산업부 비축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방산업체들이 전략 물자가 필요할 때 신속 지원이 어렵지 않겠는지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 ○ 무인기 block-I 전손되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으나 2년간 지연 끝에 중단 결정이 내려져 block-II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 지적 ○ 특수침투정 업체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국외구매로 결정하였으므로 소송의 가능성 있으므로 사업 관리 철저히 할 필요 ○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성능확인 관련 지연되고 있는데, 후속사업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능확인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 ○ 국내구매사업은 대상장비 선정, 구매시험평가 후 납품 과정에서 기품원의 품질검사 없이 소요군이 수량 및 성능확인을 진행함. 소요군에 인도된 이후 사용자 불만 제기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국내구매사업 대상인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요군의 성능확인 시험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KF-21에 장착할 예정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의 ○ 한국국방연구원(KIDA)는 ‘공대함유도탄-II’ 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미확보’ 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최대속도에 따른 작전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임 ○ 공대함 유도탄이 있으면 최현급 구축함에 장착될 전술핵 탑재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는 평가도 나오는데, 사업 추진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방위사업청은 2026년 3축 체계 예산을 약 22% 증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준비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소형무장헬기 사업이 개발시험평가에서 미충족임에도 불구하고 방추위(분과위) 심의·의결을 통해 전력화를 강행한 전례가 있는데,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에도 적용하여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현행 법령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에 따라 사업의 특성,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연속성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답변 ○ 한국형전투기 KF-21에 미국산 무장 장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공대지 정밀유도포탄 등의 무장이 가능하다고 답변 ○ 미국산 무기 구매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신속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종결정 평가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국가공인기관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어 차입통화 다변화 및 파생상품 계약 활성화를 통한 업계 부담완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 ○ 미국과의 무기 거래 과정에 절충교역을 행사하여 군수품 등 국내 생산 품목들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절충교역 예외조항 삭제할 필요 ○ 단종부품 재생산 문제 해결 필요 ○ K-9자주포 에어컨이 없어 전투원의 편의성 저해되는 것과 양압장치가 없어 화학전에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성능개량사업에서 냉방장치 장착하고, 현용 가스입자여과기 외에 양압장치 설치여부는 군과 협의 예정임을 답변 ○ 국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을 재정부의 손에만 맡겨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보다는 「방위사업법」에 사업타당성의 세부 규정들을 명시하여 동법에 따라 동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임. 국방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사타를 받아야만 하는데,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사업만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방위사업법」을 개정할 필요 ○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기재부장관에게 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면제여부는 기재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기재부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동 면제요청 규정은 의미가 없음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예산 300억원 삭감되었는데, 작전요구성능(ROC)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ROC에 따라 AI기술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적용할 필요 ○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E1전차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책길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피아식별장비 Mode-5 방산물자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의 ○ Link-16과 Link-K가 연동되지 않는 문제 질의 ○ 풍산이 탄약 생산에서 시작하여 동 분야 우수기업이 된 사례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민영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방산지원	○ ‘배터리 안보’를 위해 표준화 규격 추진 및 군용 배터리의 국산 조달과 공급망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및 상생 중심의 산업 생태계 확립이 중요 ○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필리핀에서 건조계약 체결된 것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 ○ 미국 함 건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 ○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나 T-50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 ○ 캐나다 잠수함 사업관련, 재래식 잠수함으로써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보고-III Batch-II의 장점을 일본도 가능하게 되므로 사업 관리나 지원 필요 ○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잠수함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를 ‘개조개발’ 하는 사업까지 국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예산으로 지원해 줄 정도로 우리 대기업의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 하는지 질의 ○ ‘방산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 ‘국가 직접 지원’ 예산까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불균형 심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현재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율이 대기업 지원보다 더 높지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율을 축소하거나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 방산의 경쟁력은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탄탄한 중견·중소기업 생태계에서 비롯되므로, 방위사업청장은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바로 세워주시기 바람 ○ 이스라엘은 대량학살을 일으킨 나라인데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 ○ K-방산의 성장 속에 그림자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K-방산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 ○ 방산 대기업과 그들에게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 간 상생과 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답변 ○ 방산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넘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 ○ 이라크에 천궁Ⅱ 수출 계약 후 1년이 지났지만 업체 간 이견으로 제작도 시작하지 못하여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대한 질의 ○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보다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할 다양한 제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적 보완책 마련 필요 ○ 범정부 방산수출협의체에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국정원, 방사청 등이 들어가 있는데, 산업부와의 비축 정보 공유·협력 체계도 이 협의체를 통해 구축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 ○ 방위산업이 성장할 때 대기업 매출은 68% 성장함에 비해 중소기업 매출은 43% 성장하였으며, 체계업체, 협력업체, 일반업체 간의 손익계산서도 차이가 큰 상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할 것이라 답변 ○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초대형 단일 계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주요 수출국의 정책변화나 지정학적 변수 발생 시 국내 방산업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므로 방산 수출국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방안 모색 필요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므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입체적 지원 방안 필요 ○ 방산기술혁신펀드 집행률이 30%에 불과하는데, 이는 적극적 투자와 신속한 자금 공급이라는 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 과정에서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설명회 등 수출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구매국 맞춤형 개조개발 지원으로 총 4천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외전시회 참가시 UAE, 사우디, 이라크, 에스토니아 등 주요 방산협력국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계약성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활성화를 통해 미래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현재 구축함은 해외에 수출 전례가 없는데, 국내 기술력을 결집해 수출연계형 모델로 확대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최근 방산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는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영업이익 증가폭의 차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방산수출이 확대되면서 그 편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 ○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2년동안 그 성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 이후 방산 상생협력 로드맵 수립, 상생 교류 행사, 상생수준평가 등을 추진중이라는 답변 ○ 상생협력기금 외에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상생수준평가 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활용 실적,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도를 조사하여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형 부품국산화 과제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 ○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방산협력분야를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사업에 대하여 미국과 논의를 진행중이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가능할 것이라 답변 ○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의 전례를 참고하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K-2전차 등 방산물자에 희토류 사용하는데,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정 물량 비축할 필요 ○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생산한 선박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행정명령 등 우회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답변 ○ 외국 함정,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를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수출에 포함시키고 수출확대보상액에 포함시킬 필요 ○ K-방산이 호황이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체계업체에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기업들간 상생협력 방안 검토중이라고 답변 ○ 현행 방산원가제도는 고정이윤 중심인데, 해외 원가절감 사례를 참고해서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
국방기술 보호	○ 최근 5년간 국내 백도어 해킹 적발 현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신고 접수된 건수가 없다는 답변 ○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탐지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필요 * 무선백도어는 인터넷 연결 없이 무선으로 접속 가능한 비밀통로로, 전산장비에 숨겨진 초소형 칩을 통해 보안망을 우회해 원격 침투·데이터 탈취를 가능하게 하는 공격을 말함 ○ 우리 정부는 AI시대를 대비하여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방산 클라우드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 ○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을 ‘자원체계’와 ‘전장체계’로 구분해 클라우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산-클라우드’ 구축 상황에 대한 질의 ○ 방산클라우드 사업은 현재 「방산보안업무훈령」과 「클라우드시스템 보안관리 지침」에 근거해 추진되는데, 방산업체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방산클라우드 사업을 국방 R&D·정보화 예산과 연계하거나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민간기업 중심 기술을 국방에 적용할 때 기밀·보안 문제와 기술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이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최근 영세 중소기업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체계 구축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 정부안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공급망 공격이 급증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 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예산확보 노력 필요 ○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협력업체라도 방산 공급망에서 비중이 큰 경우에는 방산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실시 필요 ○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는 방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국방기술 이전’과 ‘기술보호’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면서 민간업체가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행법상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렴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하므로, ①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거나, ② 업체 명의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보안 체크를 위하여 민간업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양해각서 체결로 KF-21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 ○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방산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KF-21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올해 말 기상청과의 임대 계약이 종료 되는데, 향후 청사의 대전 이전 등 대책에 관한 질의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주장하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완 공 후 입주 예정”이라는 계획은 현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 으로 보임 ○ 방위사업청 본청과 산하 기관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 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만 서울에 존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람 ○ 방위사업청은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정부 정 책에 따라 과천·대전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있는데, 왜 국방신 속획득기술연구원은 용산을 고집하는지에 대한 질의 ○ 정부의 지역공약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이전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마련되 고 있는지 질의

5. 육군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육군 ROTC 출신 장교의 전공 연계 제한은 장기 복무 및 고위직 진출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37사단의 실탄 관리 우수 사례를 전군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무참모가 없는 부대에서는 명령·지시의 적법성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시 계엄 숙지와 법무참모 등 법률지원 체계 보완이 필요함. ○ 장성의 보병 작전 특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과별 진급 예정인원 제도를 소장급까지 확대하고, 합동·연합근무 경험의 장성 진급 필수 요건화, 출신 병과가 아닌 역량 중심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 ○ 육군항공학교장에 보병 병과 출신을 부임시킨 것은 비정상적인 인사로 보이는 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기교육학교는 해당 병과 출신이 학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필요함. ○ 군 인사시 블랙리스트, 집단따돌림 등 인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비상계엄시 특수전 항공단 헬리콥터 간 통신기록, 교신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화력부대의 간부 보직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수방사 UFS 훈련시 방첩사 출동한 것과 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음. ○ GP·GOP 근무자들의 진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복무여건도 개선하여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비상계엄 해제의결 후 서울로 가기 위한 버스에 탑승했던 것은 2차 계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인원들은 군의 명예를 위해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며, 버스에 탑승한 영관급 장교가 진급자 명단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비상계엄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 법무실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군 간부 직업만족도 저하에 대응하여 급여정책을 포함한 사기진작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봉급체계 인상·초과근무·의전·공무원 봉급 획정 등 보수·처우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군인들의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와 헌법 수호를 위해서 내란에 가담한 자를 발굴 조사에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4년 8월부터 계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계엄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평시 계엄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였음은 문제가 있음. ○ 장군 진급심사가 지연되어 일부 장성들이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충주시 유튜브에는 등장하는 ‘북괴’라는 표현이 육군 영상에는 빠져있음. ○ 상비예비군이 목적 외로 소집되지 않고 제도의 취지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어서 훈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GP·GOP 보안 위반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육군 차원의 예산, 인력, 물자, 장비 지원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교육 및 군사 훈련	○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역 장병들이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경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음.
전력증강 및 운용	○ 민군 상생 주둔지 통합과 관련하여 시범식 사업이 40년까지 연기된 것은 문제가 있음. ○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하여 육군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갑 및 기계화사단에 자동화와 지능화가 필요하고, 포병 역시 효과적인 전투역량 보강이 필요함. ○ 교육용 드론의 핵심 부품은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소요제기 및 확충을 위해 표준화, 모듈화가 필요해 보임. ○ 동원사단의 필수전력소요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상비예비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부대관리임무는 민간용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군의 본연의 역할인 전술훈련, 병기본훈련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2명과 군무원 2명, 총 4명이 운용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한 바, 서울권 학군단의 인력운용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 우리 군도 전방 접적 지역을 제외하고 비전투 분야 업무를 시급히 아웃소싱해야 재난적 상황의 병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음. ○ 현행 하드웨어 기반 중심의 암호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체계로의 전환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군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높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속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소지원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카투사 선발 시 지역 및 학교 출신에 따른 편중된 불균형 현상(상위권 대학 내 카투사 지원문화, 지역별 영어 학습환경 격차 등)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환경 변화와 기존 인사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병력 운용 및 주거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경기·강원 북부 민통선 지역의 출입 절차 복잡성과 부대·지역별 상이한 통제로 인한 주민·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 통제 체계를 국방망 기반 방식에서 인터넷망 기반의 민관군 협업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산 편성 없이 단순히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전투력을 향상하라’는 지시는 부대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육군에서 주요장비 도태시 전력공백을 우려하여 장비도태를 건의하지 않고 있음. ○ 납품업체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CCTV를 납품하여 전방에 설치된 CCTV를 모두 철거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일이 있었음. ○ 군 유휴지에 공공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초급·중견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선발 결과 골프 관련 자격이 없고, 형사처벌 등의 기록이 가장 많았으며, 전역 전 골프장 관할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선발된 것은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력 선발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임. ○ 중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시효중단 조치를 3년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아 불납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735만원의 국고 손실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이 있었음. ○ 로카우스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사무실이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임. ○ 707특임단에서 장비를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면 특수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2024 국정감사 당시 화생방 보호의 개발이 미진함을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화생방 보호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 군 운용에 문제가 있음. ○ 초과근무수당 여부에 따라 대위와 소령의 봉급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영관급 장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 심리상담 보조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신속도입 방안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6. 해군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해군의 업체 단말카드 비치·정부구매카드 분할결제 등 부당 집행 관행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의뢰 및 기관경고 미이행 부대 처벌·수사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 대통령부부 여름휴가시 군수지원정 등 군의 자산들이 동원되고, 수십 명의 군 인력이 투입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해병대의 준4군 체제 독립과 관련하여 13개의 권한 위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사관, 특히 하사 충원율이 저조하므로 충원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함정 탑승 장병의 미래도전휴가는 육·공군과의 형평성 문제, 30일 전 전역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잠수함 함명은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에 따라 독립운동가로 제정해야 하고 별도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나, 규정에 반하는 인물로 함명을 제정한 것은 부적절함. ○ 동원 재임영훈련은 동원훈련 미참가자에 대한 필수보충훈련임에도 해군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25년 해군·해병대 예비군 교육 훈련 지시서」 위반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검토하기 바람. ○ 25년 5월 포항 해군초계기 사고 관련 순직 군인에 대한 훈장 추서 조속히 시행하고,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진상규명도 조속히 할 필요가 있음.
교육 및 군사 훈련	○ 해군은 공중으로부터의 드론 위협뿐만 아니라 해상, 수중 드론의 위협도 받게 되는바 전혀 새로운 위협 상황을 반영한 대응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전력증강 및 운용	○ 드론이 경찰·정보수집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군은 ‘무단촬영 및 군사정보 유출형 드론 위협’에 대한 별도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핵추진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대양해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측되는 실전배치 시기 단축을 포함해 전력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보고-III Batch-III 1번함을 공개사업으로 전환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보고-III 배치-II 1번함 진수식에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불참한 것은 국민들에게 군사대비태세가 얕아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해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국력과 우리 역량에 맞게 우리의 안보 목표에 맞게 우리 해군력이 가장 강력하다는 정신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되는 가운데,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운용, KDDX 등 전력화의 속도를 빠르게 낼 필요가 있음. ○ 함대의 교대주기를 잘 관리하여 동남아에서 우리의 해군력의 존재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다국적 해상작전부대와 연동하여 동남아에서의 우리 국민의 보호가 필요함. ○ 현 정부의 전작권 회복·전환과 관련하여 해군과 해병대도 5년 동안의 로드맵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해상풍력발전기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위협 문제를 비교해서 해군이 작전성 검토를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전력화된 어뢰가 없어 무기체계의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군은 방사청,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임. ○ 함정 크루제도는 종합적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되, 제도를 장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시간 해상 작전능력 입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접경지역에 배치한 전력을 제외하고, 주변 국과의 분쟁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어 해군 차원에서의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임. ○ 미국이 미군 합동교전능력을 우리 이지스함에 수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 후 미국산 전투체계 연동에 대해 협상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P-3CK에 ‘비행데이터기록장치(FDR)’가 없어 추락사고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확보가 필요하고, 사고로 발생한 부족소요를 대체하기 위한 항공기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거주환경이 열악해서 함정근무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함 승조원 거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함정 MRO 사업 관련 국내기업의 방산역량 강화와 정부의 방산정책 지원을 위해 해군의 노력이 필요해보임. ○ 증대되는 위협과 작전 피로도를 고려하여 청해부대의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노후화된 기반전력에 대한 대체전력의 적기 소요 발굴·사업 추진·전력화를 통해 장비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전쟁수행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유·무인전력지휘함 보유사업을 추진 중이나, 2040년 운용까지 15년이나 남아있으므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진행이 요구됨.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 2025년 8월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에서 해군사관학교만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이익을 국내산이 아닌 저렴한 외국산 식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판단됨.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복지	○ 한화 필리조선소의 방사선 차폐 설비 및 원자로 정비 등 즉시 투입 가능한 건조·정비 인프라 보유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교육생들의 안전과 산악전훈련의 완성도를 위해 산악전훈련장 시설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평택의 피태곳 봉수대에 대한 주민들의 출입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해군 지하 공동구에도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 안전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도 소요제기할 필요가 있음.

7. 공군본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미국과 일본 등의 예비군 조종사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도 전역 조종사의 군 복귀 기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공군 군사경찰특임대 부사관이 진급 후에도 부대 내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개선을 검토하여야 함. ○ 포천 오폭 사고 등 관련 사건에 대해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군 기강 확립을 점검하는 한편, 공군참모총장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행정구역 중심의 기계적 피해지역 설정을 지양하여 실질적 피해 구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알림특시스템의 사적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발송 권한을 통제하고, 발송 내역 점검을 통해 보안 위반 여부를 상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군 공항 소음에 관한 보상기준을 현실화하되 민간 기준과의 형평성 및 오래된 적용기준을 함께 정비하고, 회전익 소음 측정의 별도 기준 마련과 성남·수원공항 등 고도 제한의 탄력적 적용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감시·정찰·지휘통제기의 탐지거리 숫자가 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공군 기본군사지식 교본, 신병 훈련용 교재가 편향되게 서술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검에서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 차원에서 미군과 협의가 있었어야 했음. ○ 공군 비행사고의 원인으로 개인적 과실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로, 보고 상황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작전센터장을 조종병과가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무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원공항 이전 지연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예비후보지 선정의 문제를 보완하고, 장병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공항 시설의 관리·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송기 일본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비행계획 미제출·영공통과 허가번호 미확보·국제 조난신호 숙지 미흡 등의 문제를 시정하여, 일본 영공 침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군 조직 전체의 전문성·다양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비공사 출신의 군 고위직 진출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군내 사고와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군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25년 무인기 운용 과정에서 ‘점 포착’ 및 위해성 판단 여부와, 평양무인기작전 및 아파치헬기 동원 등 통합정보작전을 공작사가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교육 및 군사훈련	○ 전자전 훈련체계의 최근 3년 평균 가동률이 약 40% 수준으로 매저조하여 조종사 정상 훈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교체사업 전력화 목표 시점(2031년)까지의 훈련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력증강 및 운용	○ 북한 및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 대비 신속한 징후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확보를 위해 ‘초소형위성체계’가 적기에 전력화되어야 함.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응 절차를 강화하고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함. ○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 동수로 이동할 당시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영공 방어를 위해 방공 식별 능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KF-21 전투기 블록3 소요결정시 일부는 5세대, 5.5세대 무인기와 전투기의 결합 또는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우주기상예경보체계가 추가지연없이 적기에 전력화되어야 하고, 공백을 최소화할 대체 감시체계를 준비해야 함. ○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 및 레이더 우주감시 전력은 우주영역 인식능력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함. ○ 스텔스 항공기 대응을 위해 한·미 정보자산 연계 강화, 항적 데이터 융합체계 구축, 레이더 대역별 보완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 강화 등 조치가 시급함. ○ 민간 기술과 인프라를 국방 우주전력에 접목하기 위해 꾸준히 협력하여야 함. ○ KF-21 탑재 초음속 공대함유도탄 개발사업이 사업타당성 미확보로 중단된 것은 우려스러움. ○ 북한이 요격이 어려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핵기술을 지속하고 있어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KAMD 구축도 중요함. ○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국 공군전력과 미국 항공전력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유사시 미국의 대북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 ○ F-16·KF-21 개발 과정에서 공격 위주 훈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우리 해상으로 주변국 위협 전력이 진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사전에 공중전에서 저지할 수 있는 기동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군의 표적식별장비의 랜턴 업그레이드는 유사시 정밀타격을 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해 필요하므로 공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사일 방어 체계 한미 간 통합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보 연동 및 공유 등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공중급유 전력확충과 조종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수 직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군의 우수한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장거리레이더가 초과 운용되지 않고, 고장으로 운용 중단되지 않도록 적기에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F-35, F-15, F-16 부품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업체와 잘 협조할 필요가 있음. ○ KF-21이 전력화되면 F-35 없이도 Mid-high 이상으로 충분히 전력이 보장될 것으로 보임. ○ 북한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400km 안팎으로 비행한 것은 라인 오브 사이트(Line of Sight)로 해명이 어려우므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사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KF-21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C-130에 산불진화 장비인 MAFFS를 탑재해서 운용하려면 선도기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공군이 아닌 산림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음. ○ 화생방 방호는 장병의 생명과 임무 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100%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군 내부의 은퇴군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 병력 감소 추세를 고려한 은퇴군건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8. 해병대사령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군 인사 군 조직 군 감사	○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조치를 무효화하는 등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김계환 전 사령관을 단국대 석좌교수로 해병대사령부가 추천한 것은 부적절해 보임. ○ 모든 작전의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 진작 방안과 명예회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병대 직위별 편제계급 조정 등을 통해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는 초급간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사망사건관련 조사 진행여부 및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필요해보임. ○ 대청도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 사고 예방대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준4군체제 개편이 해병대 인력 충원 및 의무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력증강 및 운용	○ 육군과 해병대의 코브라 헬기 도태 시기 차이로 작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 군이 협조하여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45년 된 견인대공포를 사용하는 등 전력 노후화가 심각하므로 전력 현대화가 필요함. ○ 해도 등 지형자료 변동·유출로 전·평시 위협이 변화할 경우 IPB를 재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전계획 수립, 시설 반영 및 훈련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는바, 해병 2사단 차원의 IPB 체계·역량 강화가 필요해보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서북도서 과학화 경계작전을 구축하여 해병 본연의 임무인 상륙 작전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군 수 군 시설 군 의무 군 복지	○ 백령 해병대원 초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호시설을 앞으로 10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백령발전소 증설공사 지연과 관련해 해병대 차원에서 한전과의 협력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군인의 위라벨과 업무 보람을 위해 열악한 복지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필요가 있음.

9.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12·3 비상계엄 관련	○ 12·3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특히 육군 차원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비상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의 경계태세 및 가담 여부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명령 복종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군이 국민을 향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쿠데타임. ○ 12·3 비상계엄 당시 제2기갑여단장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군단장이었던 지작사령관이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함. ○ 2024년 중 아파치 헬기와 무인기를 동원한 작전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작전은 억제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기 이전에 특정 용어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군사작전 및 전략기획	○ 북한의 직접 침투는 1998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군 병력의 70% 이상이 경계작전에 투입되고 있는바, 병력자원의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경계작전 운용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과학화경계체계가 구축되고 있음에도 실제 경계병력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경계 실패에 대한 지휘관의 과도한 책임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식적 완화가 필요함. ○ 민통선 축소는 군사보안 및 지역주민 권리 간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작사의 역할이 중요함. ○ 9·19 군사합의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작전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함. ○ 9·19 군사합의에 따라 UAV 표적감시 능력이 최대 83%까지 감소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9·19 군사합의 복원에 의한 안보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 관점에서 국방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군단급 송골매 UAV는 수명연한을 초과해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운용성 및 감시능력이 저하된 상태임. ○ 합참의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작사의 드론봇 전투단과의 관계가 불명확함.
전력증강 및 운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섬유 기반 유선통신 드론이 실제 운용되고 있는 바, 해당 드론을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래 위협 대응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空挺)·공중강습작전 전담 부대가 부재하는 등 현행 전력과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위협은 현용 전력으로 대응하고 미래 기술을 병행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군 조직 군 인사 교육·복지 등	○ 부서관 이탈 현상이 전투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육군 전력의 핵심인 GOP 부대에서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한 사례가 없는 것은 인사제도상 구조적 문제로 보임. ○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보직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위관급 이하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적용으로 영관급 장교와의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에 대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해 국방부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부사관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방 인력 공백 해소 방안으로 상근예비역 제도의 활용 확대가 필요함. ○ 장병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구조체계 개편 및 응급구조사 충원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기타	○ 최근 집중호우로 군수품 피해가 다수 발생한 바, 자연재해에 대비한 군수·장비 관리 및 복구 대응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10. 국방과학연구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운영·관리	○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 관리·활용 성과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 적용 특허 998건이 누락 제출되어 특허 활용 성과율이 22%로 낮게 산출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전체 보유 특허 5,612건 대비 기술이전 및 무기체계에 적용한 활용 특허는 2,248건으로 활용 성과율은 40.1%로, 타 정부출연기관들(40% 내외)과 유사한 수준임 ○ 국방과학연구소는 미활용 특허를 정리하고, 기술이전 및 무기체계 적용 등 실질적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실제 징수율과 기업규모별 실질적 기술료 감면 혜택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기술이전 대상, 감면적용 후 실제 징수 기술료율은 46.5% (방산수출 45.6%, 민수 64.7%)이고,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25% 감면혜택이 있었다는 설명임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에 대한 사용처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및 수출개조개발에 40%, 국방과학연구소 소규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보상금 최대 35%, 간접기여자 보상금 최대 7%,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경비와 지식재산권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 ○ 국방연구개발 시험장 이용 애로사항 중 1순위는 시험평가 관련 기관 협조의 어려움(사전 예약 등), 2순위로 시험평가에 적합한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장소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한 후 기술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유권이 기업에 귀속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미사일 개발 수준 향상된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인력이나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 ○ K-9 등 수출 무기에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홀로그램, 암호화 등을 적용중이며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라는 답변 * Anti-Tampering(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기술 자산이 외부에서 탈취·변조·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 기법을 말함 ○ 국방과학연구소 해상풍력발전과 시험 사격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
조직·인사·재무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사업관리 부실 요인 중에는 전문계약직의 짧은 계약기간, 정규직-현역 간 불신, 부서장 및 기관장에 대한 반복적 제보 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 조직문화와 구성으로는 어떤 대책도 어려운 관계로 민군협력진흥원과의 통합 등 조직을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특허 관리 및 유지 비용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감사원이 2023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3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 및 감사원 재심의 결과에 대한 질의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에 따른 퇴직,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우수 인력의 지원 기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징계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기 바람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무인기 개발 실패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한 징계는 R&D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의 자문이 국방연구개발에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민군협력진흥원과의 통합방안에 관한 질의 ○ 정부의 지역공약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이전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및 민군협력진흥원은 2026년 7월 통합을 목표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중이라는 답변 ○ 국방과학연구소 시험평가 위험수당이 1회 7,000원, 월 50,000원 상한으로 금액이 낮은 것에 대한 질의 ○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방위사업법」의 실비 보상 개정 취지에 맞게 실비정산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특수조건을 개선하도록 표준지침 개정 또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 ○ 고성능 무기체계, 신규 무기체계 시험장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협력 필요

11.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 국방기술품질원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실전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AI적용 무기체계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AI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국방인공지능안전 연구조직’ 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것 ○ 탄약시험장 인프라 부족 및 해외·해상 시험의 한계(기술 유출, 비용상승, 시험 제한 등)를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고성능 탄약 전용 시험장 구축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것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분 야	감 사 실 시 내 용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정부가 강조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44.5%로 과도하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단계적 독립 법인화 추진 필요 ○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심사기준인 ‘군 운용성 향상’ 평가항목 추가 이후 부품국산화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단종부품에 대한 대책 필요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방부(93건)

- 군 의료체계의 기능 약화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군의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인력·시설·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력부족 상황에서 유희시설 관리부담이 일선 간부, 병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유희시설 정리,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GOP 급여 소령·대위 간 급여 역전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군인 가족 일자리·교육·돌봄 지원체계를 포함한 병영 처우 전반을 점검하여 조직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수당·가족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
- 주한미군 공여지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군사적 필요성이 낮은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및 치유 비용분담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 유지·인력 확충 및 임관율 개선을 위해 특수직 무수당·교육·경력 인정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운영을 위해 공통 운영·정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전 과정(소요-획득-전력화-폐기)을 통합 조정하는 국방부 컨트롤타워 기능과 범정부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
- 군 불법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기술·관리적 조치를 강화하여 병영

내 불법도박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
- 민간위탁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업체 선정·계약 단계에서 국내산 식재료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관리체계 및 기본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할 것.
- 취사장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조리기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각 군 취사시설의 전기식 조리기구 도입 확대를 적극검토할 것.
- 군인공제회 렌트 차량 계약 종료·연장 과정과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계약 지연·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운행일지·하이패스 기록 등 차량 운영 기록관리 및 옵션 선정·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 방첩사령부가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 전장망·C4I·데이터센터 보호를 위해 DR(재해복구) 체계에 대한 예산 확충을 포함하여 보강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
- 노후 재외무관부 대도청 장비교체와 신규 장비 확보를 추진할 것.
- 간부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군 사망사고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10년간 자살 비율이 높은 원인을 포함하여 자살 원인분류 및 III형 순직 기준 등을 전면 재정비할 것.
- ‘도움간부·배려간부’ 제도의 운영실태와 자살사례를 점검하여 고위

험군 장병이 위험 환경에 재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군복지단이 군납 계약 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벤더사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제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2·3 불법계엄 동원 장병에 대한 2차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특정 군 및 사관학교 출신 편중과 국방대 총장 문민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에 대한 균형인사를 강화할 것.
- 군 사격장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 군 주둔지·시설 위치·배치 등 군사기밀이 상업·오픈소스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
- 장기 위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로카우스 호텔의 중장기적 재정문제 해결과, 장병 및 예비역의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군 수당이 ‘주먹구구식’으로 신설·증액되면서 14종 60가지로 세분화된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수당을 포함해 수당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위험도, 근무지 여건, 자격, 계급, 복무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직군 등장 시에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당체계를 운영할 것.
- 구글이 독도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와 같이 글로벌 플랫폼의 지명 오표기는 국가 이미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
-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시 안보

를 중요 고려 요소로 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

-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관리하는 자원관리체계는 시스템 복구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서버 방식으로의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군무원 대상 정책 및 복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군관사 및 간부숙소 대안인 민간주택 입주시 전세자금 이차지원 사업 기준(5인 이하 가구도 지원 가능)을 명확히 하달할 것.
- 드론센터를 통한 대규모 인력양성 계획을 교육 인원·강사·시설·예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할 것.
- 군인의 교육과 주거 지원 등 복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새로운 부대·사령부 창설 시 기존 야전부대 단순 인력 차출을 지양하고, 정원·조직 재조정을 통해 야전 전투력 보호 및 초급간부 전역·사기 저하 요인 해소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상비예비군·퇴역 군인 등의 숙련인력 재활용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저연차 군무원의 이탈 원인을 분석하여,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 병력 감소에 따른 비전투분야 업무 아웃소싱과 연계된 제도 정비 요소 등을 검토할 것.
- 국군의무사관학교 추진 과정에서 정원·예산·교육 및 실습 등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 특정 시기 전문약제병 모집 경쟁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계약 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감정평가와 매각가의 현실화, 시가 형성 물품에 대한 개별 매각 방식으로의 전환, 시가 미형성 물품에 대한 총액 계약 방식으로 전환, 실제 수량을 바탕으로 한 매각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군무원 임무의 특수성과 전시 임무를 감안하여, 군무원 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 적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여군 및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상시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병사 휴대폰 충전보관함 수요가 많은 육군부대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실효성 및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정식 도입을 검토할 것.
- 법무부와 연계하여 장병 무단 출국 사전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단 출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GPS 기능 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외부 앱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보안체계를 마련할 것.
- 광명 시흥 신도시 추진과 관련 군사철도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수있도록 노력할 것.
- 민간위탁 업체가 사후정산 시 면세제품인 식자재 원품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국방부 차원의 재

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사들은 간부와 같이 보충 피복 선택권이 없으므로 전산 피복비 형태로 보충보급 하는 방안 또는 속옷, 운동복 등은 개인이 상용품을 자율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급간부들의 예식장 대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쟁기념관에 야외결혼식장 설치를 검토할 것.
- 미국에서는 병 출신 장교들도 장군이 된 경우가 있는 만큼,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군인으로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민간인의 출입이 가능한 의성·고성 등 시험장에서 대드론장비 등 군용장비를 개발 및 시험 절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절차는 개선할 것.
- 총기 관리 규정 및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규정 미준수로 군 총기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바, 총기 관리 전반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간 방위분담 및 전력 운용의 균형을 맞추는 대책을 검토할 것.
- 소음이나 도비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스마트 과학화 사격장 도입을 검토할 것.
- 주요 보안시설 내 실효성 있는 영상 차단 및 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 군마트 제품 재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민간 플랫폼 협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국방 광대역 통합망 3공구 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구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조사할 것.
- 기본 병과 통폐합, 첨단 병과 신설, 인력 운용 구조 개편을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하여 검토할 것.
- 합참, 국직부대 등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준수를 위해 반기별 국방개혁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
- 56사단장 등 경호가 필요하지 않은 지휘관에 배정된 특수자동차를 회수 조치할 것.
- 충실하고 올바른 예비군 안보 교육을 위해 안보교육의 온라인 교육운영, 국방부 자체교육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허위로 군수품 손망실 처리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관련 증빙 의무를 강화할 것.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장병에 대해 단기간 내 전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책임 방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역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장병 보호·관리 체계를 점검할 것.
- 식약처 고시에 따라 군 식용 얼음을 점검하고, 살균 가능한 제빙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방부 훈령을 개정할 것.
- 군 장병 AI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한 AI 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AI 기초교육을 넘어, 실제 직무와 연계된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위탁 급식 정책은 정책 당위성이 떨어지므로, 군무원 또는 국방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총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RFID,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통제 플랫폼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 군 주거안정을 위해 관사 및 간부 숙소 확충,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수립,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단가 및 주택수당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본급식비에서 가공품 및 원물(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 변동 현황 및 적정 급식비율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한 군인자녀학교에 대한 사업을 국방부가 지원하거나,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군인자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업체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요건 제한은 완화하고, 수의계약과 기한 보장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연구개발 성과를 더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훈령을 개정할 것.
- 난연 소재 개발에 민간업체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비상계엄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의 불법적인 관여 방지를 위해 충무8000 계엄기본계획, 계엄실무편람 등 하위문서 개정을 검토할 것.
- 상관의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명령에 한해 복종하도록 명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

- 군의 신뢰 회복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정이 미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민 재산권 존중을 위해 국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
- 예비전력 발전을 위해 국방비 대비 예비전력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
-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주한미군 협의에서 접점을 마련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포함된 군사합의를 새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 별내역 군 전용철도를 육로수송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임무수행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것.
- 국방부가 임명권을 가진 한민고 이사장·임원의 비리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심 비리 관련자에 대한 퇴진 조치 및 학교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진할 것.
- 예비군 부대의 총기 관리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기 자동화 손질·세척 장비 도입과 민간용역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GP·GOP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헬기·수송차량 예산 반영

및 거점병원 연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응급헬기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을 위해 지휘체계 조정 권한 명확화, 무선통신망 재정비 등 운영기반 개선을 검토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상임위원회를 재개최하고, 공정성 우려가 있는 노무법인 선정 및 교체 절차와 재조사 추진 여부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재점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 및 「계약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
- 급변하는 한반도 위협 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수치 기반으로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비핵화 지수를 다시 산출·측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
- 병 병역처분변경 심사를 총장 직속으로 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것.
- 구직휴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인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위로 휴가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것.
- 군사용 무인기의 연구개발, 시험비행, 훈련 등을 비상활주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나형운 증인의 전역 과정간 의무조사의결서 조작 등 행정 오류와 보상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
- 평택 미군기지 공여 구역(CPX훈련장)이 지역민들의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환 시기를 조속히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정 화장품 업체의 국군복지단 납품 과정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국군복지단의 화장품 군납업체 선정 심사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2. 합동참모본부(15건)

-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 개정으로 비상계엄 시 국무총리 및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회에 대한 ‘통고’가 ‘통보’로 변경된바, 해당 개정 내용을 원상복귀할 것.
-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조성할 경우 레이다 난반사, 소음·진동 발생 등으로 아군 장비 운용 및 전투 실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작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
- 미국 등에서 초소형 SAR 상용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 군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정찰 전용 위성 사업에 대해 전환적인 접근을 할 것.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는바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군사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평가)하고 미측과 조율해 나갈 것.
- 훈련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전 전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계·수집·분석하고, 이를 우리 전투체계에 반영할 것.
- 드론 전력 보강을 위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가 중심이 되어 방위사업청과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연되고 있는 드론 도입·전력화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
- 12.3 내란 등 군령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일벌백계할 것.
- 북한의 신형 무기의 전력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
- 전략사령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개념을 체계화할 것.

-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로 위장하여 북한에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부족한바 이를 조사할 것.
- GPS 교란 대응능력 향상 훈련에서 3개 기관 간 정보 연동이 미흡한 문제가 확인된바, 소액 예산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인 만큼 중기계획이 아닌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즉각 보완할 것.
- 중동정세 불안에 대비해 해외파병부대 대비태세 및 군사적 지원태세를 잘 유지할 것.
- 비상계엄 관련 드론사가 정상적인 군령(軍令) 및 작전 지휘 계통을 거쳤는지 조사할 것.
- ISR 및 해상 정찰 자산이 대중국 견제 임무로 일부 전용된다면, 대북 방어선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용방지 및 보충계획 등 자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것.
- 경계 작전 개념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서북도서 과학화 경계 강화 부분을 검토할 것.

3. 병무청(24건)

- 병무청의 신체 치수 정보가 각 군에 제대로 전달되어 신병들이 입영 초기에도 적절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병역이행자 예우제도가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적용 기준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사회복지요원의 근태기록을 복무기관과 연동하여 근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이중국적을 가진 병역의무대상자 중 국적을 포기하고 40세가 넘어 입국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역면탈 조장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병무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증원 및 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동원훈련 응소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요원의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복무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이양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장기대기 사유 병역면제 인원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부적합한 업체가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것.
- 병무청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전담조직 상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근예비역 제도, 귀화자, 탈북주민의 병역 면제 제도, 여성 복무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에 대응할 것.
- 사회복지요원 장기대기 사유 병역 면제자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관 추가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예술요원 편입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전통대회에 편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요원 전자적 근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대상 복무지도교육 미이수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신질환 사유 판정자 중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예비군 소집 관련 행정업무 일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한국어 소통 가능 외국인 군 복무 후 시민권 부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정신질환 악용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동포의 병역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병역 이행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역면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병역명문가 선정에 따른 혜택이 지자체 따라 상이한 점은 문제가 있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잠복결핵 양성자의 치료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

4. 방위사업청(49건)

- AI 무기체계는 데이터 확보와 학습이 중요한 체계로 기존 획득절차를 동 무기체계의 성격에 맞게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AI 무기체계는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데이터 축적 등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AI 무기체계 개발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애자일'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신속획득 제도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군 소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 AI·드론·우주·사이버 영역에서 새로운 획득방식 도입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4)와 국방부 내부감사(2023)에 따르면 '신속획득절차' 확대 시 사업 실패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위험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 선도적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찰 및 감시 능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미국 우주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을 노력할 것.
- 자폭드론의 적극적 예산투자, 시험평가체계 구축, 조기 전력화 로드맵 수립, 전용 시험장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 부정당 거래는 K-방산 신뢰성과 국가브랜드에 악영향을 주므로 부정당

비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실히 할 것.

- 현재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완성형 사업도 향후 진행할 예정이므로 두 사업에서 연동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중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 사업과 같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군단정찰용UAV-II Block-1사업의 시제기가 모두 파손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무기체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방산업체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전략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업체비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정부비축’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방산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 등을 정비할 것.
- 특수침투정 사업은 2025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31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이 성능확인 관련 지연되고 있는데, 후속사업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능확인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 소요군에 인도된 이후 사용자 불만 제기 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국내

구매사업 대상인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소요군의 성능확인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26년 3축 체계 예산을 약 22% 증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준비 및 관리를 강화할 것.
-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 신속시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기종결정 평가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국가공인기관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환리스크 대응을 위해 업계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 현행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금액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데, 국방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것.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예산 300억원 삭감되었는데, 작전요구성능(ROC)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ROC에 따라 AI기술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적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배터리 안보를 위해 표준화 규격 추진 및 군용 배터리의 국산 조달과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것.
-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A gain) 프로젝트나 T-50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보다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할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초대형 단일 계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주요 수출국의 정책변화나 지정학적 변수 발생 시 국내 방산업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므로 방산 수출국의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므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입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산기술혁신펀드는 적극적 투자와 신속한 자금 공급이라는 펀드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질 없는 투자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
- 현재 구축함은 해외에 수출 전례가 없는데, 국내 기술력을 결집해 수출 연계형 모델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의 전례를 참고하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K-2전차 등 방산물자에 희토류 사용하는데,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정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
- K-9 등 수출 무기에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무선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탐지 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후 소관 규정 관리기관(방첩사, 국정원)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AI시대를 대비하여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 방산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방산 클라우드의 체계적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 방산클라우드 사업은 현재 「방산보안업무훈령」과 「클라우드시스템보안관리 지침」에 근거해 추진되는데, 방산업체 등과의 협업 등을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방산클라우드 사업을 국방 R&D·정보화 예산과 연계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협력업체라도 방산 공급망에서 비중이 큰 경우에는 방산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노력할 것.
-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는 방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법상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렴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하므로 청렴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거나 업체 명의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방산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KF-21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2023년 기준 80억 넘게 방위산업진흥회에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방위산업진흥회의 방만한 운영과 내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선진국의 국방우주체계를 따라잡기 위하여 예산과 인원 확보에 노력할 것.
- 블록화되고 있는 유럽 방산분야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컨트롤타워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등을 검토할 것.
-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일회성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 마련하여 제도적 유연성과 재정적 지속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방위산업 분야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부실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정부의 지역공약과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이전 및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일정을 보고할 것.

5. 육군본부(28건)

-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하여 각 군이 체계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육군에서도 통합사관학교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마련할 것.
- 3사관학교 생도들의 안보견학·중요시설 방문 시 교육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방문 장소를 신중히 선정·조정할 것.
- 사관학교 교수에 극단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인사가 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
- 군(육군) 법무관 인사에 불공정 요소가 없도록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보완할 것.
- 정책부서의 소령 편제를 재검토하고, 소령 경력관리모델 지침이 진급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침으로 피해 입은 대대급 소령에 대해 향후 진급 선발 시 고려할 것.
- 군의 총기·탄약 관리체계를 즉시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고 있는 군 실탄 분실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회수 및 관리 허점 보완을 실시할 것.
- 총기 불출을 위해 필요한 5개 무기고 열쇠가 따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1개 통합보관함에 동시에 들어 있는 등 부적절한 총기 보관방식을 개선할 것.
- 대대 인원은 사단에 파견되고 사단 인원은 군단에 파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파견에 따른 인력 비편제 운영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AI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구축하여 경계작전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I·드론으로 대폭 보강된 전방 경계 체계(2개 사단 중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후방지역 군사시설 경계작전에 PMC를 활용한 민간용역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제대별 지휘관을 보좌하는 인력편성 수준을 재검토하고, 간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육군 ROTC 학군장교의 복무기간(2년 4개월)이 타 군 대비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을 검토할 것.
- 육군 경비정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노후 육군경비정을 대체하고 고속기동능력과 주·야간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한 신형 육군경비정을 확보할 것.
- 회전 관성력 탄약의 K-201 유탄발사기 적용시험(K-201 실사격평가) 및 기능 검증을 신속히 실시하고, 새로 개발된 탄약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것.
- 먼저 구축된 과학화예비군훈련장도 현재 구축중인 과학화예비군훈련장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
- 병력감축에 따른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육군항공 숙련 조종사 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수당·연장복무수당 등 보상체계를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대대장·중대장·행보관·주임원사 등 육군 주요 직위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전출 시 유급휴가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부사관 퇴직 시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피해 현황 · 사고원인 · 저장수명 초과 여부 · 처리대상 탄약 등)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탄약 안전관리 위반 · 탄약고 노후화 문제와 폐기시설 부족 및 폐기탄 분해 기술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한 탄약 폐기 ·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관사 · 간부 숙소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와 육군의 관사 리모델링 물량 · 예산 부족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국비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급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
- 육군 불용군수품 매각 경쟁입찰 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후 수정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
- 군 장병 전용 사이버 도박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박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현재 베레모 · 전투모 중복 착용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이 10억이 넘어가고, 베레모 제작 가능 업체가 한 곳뿐이라 조달 지연이 빈번하고 품질개선이 어려우므로, 베레모 폐지를 검토할 것.
- 독립군 · 광복군 및 신홍무관학교 출신 육사 졸업생에 대한 연구 성과를 육군사관학교 정과교육에 반영할 것.
-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이전 및 통폐합되는 대전광역시 5개소와 충남 금산구의 지역별 예비군 훈련장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
- 장병의 생명과 임무수행에 관련된 화생방 보호장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

6. 해군본부(12건)

- 군 법무관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군 법무관 제도 재시행, 민간 장기 법무관 임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함정 부사관(특히 하사) 충원율이 저조한바 제고 노력을 추진할 것.
- 해군 부사관 함정근무 기피에 대응하여 승선 장병 삶의 질 개선사업(함정 통신장비 설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것.
- 전문특기 중심 보직 편중을 완화하고, 병과 특성에 맞춘 기능별 인사·보직 운영을 강화하여 내부 현안 해결과 전군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
- 군인의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군인기본법」 제 16조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중국의 함정이 잠정조치수역에 들어왔을 때 비례성의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군사기지로 확장·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방부, 외교부, 해경 등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할 것.
- 해군 호텔은 관리위탁방식 재개정을 포함하여 수익비율·영업 운영비용 등 부적절 운영 문제에 대한 조치를 병행할 것.
- 해군을 중심으로 해군 맞춤형 군 사회복지 시범사업실시를 검토할 것.
- 전 장병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타군 대비 해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
- 함정 탑승 장병 및 해병대 장병의 미래도전휴가는 육군, 공군과의 형평

성 문제, 30일 전 전역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검토할 것.

7. 공군본부(18건)

-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등 공군 관련 일련의 사건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군 기장 확립을 점검할 것.
- 공군 수송기가 군수물자 수송이라는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근 증가하는 군용 수송기의 휴양 목적 탑승에 대해 세부 목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정기공수 운영 기준을 정비할 것.
- 성 비위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휴가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 유포, 탄원서 강권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행위자 역시 원소속 부대에서 분리되도록 할 것.
- 2025년 공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문에 ‘각종 회의·모임 등 다수 인원 집합 시’ 등 시기 표현이 불명확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공문에 시기·주기·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전 장병 교육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체계화할 것.
- 故 이예람 중사 추모비 건립 등 예우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드론 조종자 탐지 장비 도입과 대드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철통 같은 영공 방위를 실현할 것.
- KF-16 성능개량 사업 시 예산 부족으로 HMD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KF-21 전투기의 미사일 탑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작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조종사 유지비행이 전투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점검할 것.

-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명예와 자부심을 부각시키는 등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을 보완할 것.
-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스텔스기 탐지 및 추적능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조종사 확보를 위해 공정한 보상과 합리적 수당체계 확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북한의 기습공격 및 저고도 침투 전술에 대비한 방공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장기운용 중인 장거리 항공통제 레이더를 적기에 교체할 것.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주변국 방공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위해 다양한 방공위협 및 복합상황 모사가 가능한 차세대 전자전훈련체계의 적기 교체를 추진하되, 2031년 전력화 목표에 따른 훈련 공백을 메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
- 추경에 반영된 기지전력망 비상전환체계 보강사업은 25~27년 다년도 사업인데, 당해년도에 종결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한다는 추경안 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비행장 내 비행 안전구역에 설치되어있는 시설 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군 수송기의 일본 비상착륙 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행 허가 요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체크리스트 운용, 각종 규정 준수 강조, 국내 훈련 시에도 국제표준용어 사용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
- 위규비행 항공기에 대한 식별체계 및 절차가 미흡하므로 식별요격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

8. 해병대사령부(11건)

- 서북도서 해병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MRI 기기 구매 등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 해병대의 준4군 체제 독립과 관련하여 13개의 권한 위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부사관 충원율 감소로 인해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작전 훈련, 교육훈련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바, 해병대는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생들의 안전과 산악전훈련의 완성도를 위해 산악전훈련장 시설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서북도서 전문상담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K-2 탱크 계열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방어력도 보완할 것.
- 해병대를 상징하는 상륙돌격장갑차 KV-II 사업이 지연되어 주력무기의 노후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
- 추가 운용인력 증원 없이 현 해병 항공교육대 자체 운용병력으로도 해병대 조종사 교육소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용 헬기 도입을 검토할 것.
-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필수 방공전력을 보강하여 상륙작전 지원 능력 약화를 방지할 것.
- 구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

- 전 해병대사령관의 석좌교수 연임 여부 협의 당사자로서, 12월 말까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석좌교수 연임에 대해 단국대에 ‘연임불가’ 입장을 전달할 것.

9. 육군지상작전사령부(11건)

- 북한의 신형 방사포 및 군집 드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K1E1 전차 성능개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AI 기반 경계작전체계(LIDAR) 기술 관련 주요 소요와 관련하여, 소요군인 지작사와 육군·합참 간 소요제기 및 결정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전방지역 군무원 임용 후 3년 이내 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사장 가스시설에서 화재·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병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바, 인덕선 조리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
- 전방에서 수행되는 불모지 작전이 해당 지역과 무관한 타 지역 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접경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것.
- 최근 6년간 GP·GOP 부대에서 보안 위규가 다수(71건) 발생하였으며, 보안 위반 사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관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으로 인해 보안 위규가 반복되고 있는바, 징계기준의 강화 및 보안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것.
- 최근 2작전사 예하부대에서 사격훈련 중 도비탄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만큼, 총기·실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점검을 강화할 것.
- 최근 집중호우로 군수품 피해가 다수 발생한바, 자연재해에 대비한 군

수·장비 관리 및 복구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 장병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체계 개편 및 응급구조사 충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
- 탄약 관리에 있어 장부 허위기재, 요식 점검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국방과학연구소 (9건)

- 국방과학연구소는 미활용 특허를 정리하고 기술이전 및 무기체계 적용 등 실질적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방연구개발 시험장 이용 애로사항 중 1순위는 시험평가 관련 기관 협조의 어려움(사전 예약 등), 2순위는 시험평가에 적합한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장소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등이 공동기술개발을 한 후 기술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유권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사격 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상풍력발전 조성 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와 조정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신속사업의 소요기간과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의 근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감사원의 무인기 관련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연구개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징계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할 것.
- 고성능 무기체계, 신규 무기체계 시험장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협력을 추진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특수조건을 개선하도록 표준지침 개정 또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시험평가 과정에서 연구원이 잠수함과 비행기 탑승 시 위험수당 인상

을 검토할 것.

11. 국방기술품질원 (2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3건)

1)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 AI의 예측 불가능성은 실전 상황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AI적용 무기체계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AI 안전성 검증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국방인공지능안전 연구조직’ 등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탄약시험장 인프라 부족 및 해외·해상 시험의 한계(기술 유출, 비용 상승, 시험 제한 등)를 고려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고성능 탄약 전용 시험장 구축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을 추진할 것.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정부가 강조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44.5%로 과도하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단계적 독립 법인화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심사기준인 ‘군 운용성 향상’ 평가항목 추가 이후 부품국산화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단종부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IV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 및 신문내용

1.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

구 분	성 명	직 업 (소속 및 직위)	감사기관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증인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국방부 (' 25.10.13.)	구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및 유튜브 가짜뉴스 퇴치방안 관련 질의
참고인	심송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부 (' 25.10.13.)	2024년 진중문고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증인	강호순	제이케이컨벤션웨딩 대표	해군본부 (' 25.10.23.)	해군회관 웨딩홀 운영 관련 질의
증인	탁홍남	해군호텔W웨딩홀 대표	해군본부 (' 25.10.23.)	해군회관 웨딩홀 운영 관련 질의
증인	나형윤	예비역 중사	종합감사 (' 25.10.30.)	행정 착오로 인한 상이연금 미지급 관련 질의
증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종합감사 (' 25.10.30.)	군 의무항공전력 운용 관련 질의

2. 증인·참고인 신문내용

대상기관/ 출석일시	주 요 신 문 내 용
국방부 (’25.10.13)	《증인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 구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및 유튜브 가짜뉴스 퇴치방안 관련 질의 《참고인 심송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2024년 진중문고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해군본부 (’25.10.23)	《증인 강호순 (제이케이컨벤션웨딩 대표)》 ○ 해군회관 웨딩홀 운영 관련 비리 의혹 질의 《증인 탁홍남 (해군호텔W웨딩홀 대표)》 ○ 해군회관 웨딩홀 운영 관련 비리 의혹 질의
종합감사 (’25.10.30)	《증인 나형윤 (예비역 중사)》 ○ 행정 착오로 인한 상이연금 미지급 관련 질의 및 의무조사의결서 조작 관련 질의 《증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 군 의무항공전력 운용 관련 특수임무역량 강화 방안 질의